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이강일)

입법공약 <b>1</b>	<b>사법개혁</b>
내용	<p>■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p> <p><input type="checkbox"/> 입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으로 보장받는 검찰, 인신 구속을 결정할 수 있는 법원,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 카르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음. 막대한 수입료를 챙길 수 있는 전관예우는 기본이며 스폰서 관행, 접대 문화 등의 전·현직이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법조인카르텔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함</li> <li>-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독점하는 검찰의 과잉 권력 축소 역시 필요</li> </ul> <p><input type="checkbox"/> 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공무원(판검사)과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 마련</li> </ul> </li> <li>○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및 검사의 불필요한 특활비 축소</li> </ul>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인들만의 리그와 전관예우 차단</li> <li>- 검찰의 과잉 권력 및 처우 축소</li> </ul>

입법공약 <b>2</b>	<b>저출생 문제해결</b>
내용	<p>■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p> <p><input type="checkbox"/> 입법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3년 0.7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 최저 국가이며 초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인구구조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음</li> <li>-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함께 주거·고용·양육 3가지 측면의 불안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고 있음</li> <li>- 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 가족 지원 예산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정책 목표</li> <li><input type="checkbox"/> 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부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범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종합적 저출생 정책 수립 및 추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가족지원예산’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인 예산을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li> <li>: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폐지 및 본인부담금 20%이하로 축소 등</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li> </ul> <p><b>■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li> <li>- 아이를 낳고 키우며 최소한의 삶이 보장받고 기본적 생계가 이어지도록 함</li> </ul>
--	--

<b>입법공약</b> <b>3</b>	<b>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b>
<b>내용</b>	<p><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입법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위기는 환경을 넘어 산업·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RE100이나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li> <li>- 제조업 수출 경제를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도 생산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음</li> <li>-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법체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li> <li>○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li> <li>○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li> </ul> </li> </ul> <p><b>■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국경제도 등의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어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li> </ul>

## 특색있는 역사문화관광 특구 조성

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상당구는 성안길, 청주읍성, 상당산성, 청남대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도농복합도시임
- 방서지구, 동남지구 등 신주거단지는 젊은 세대 인구가 유입되며 문화복지시설 및 가족단위 놀거리, 먹거리 확충이 필요함
- 지역현안 여론조사 자체 실시 결과, 5개면에서는 ‘관광 및 농축산 상품개발’ 과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주요하게 나타남
- 역사와 문화 향유, 체험 및 관광 코스 등을 개발하여 시민에게는 여가, 지역주민에게는 수익창출이 가능토록하기 위함

###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 정책목표

- 전통도심지구, 산성명암지구, 미원낭성지구, 가덕남일문의지구로 구분하여 조성
  - ▶ 전통도심지구 : 중앙역사공원 조성 및 청주읍성 복원, 북문로 소호상점 활성화
  - ▶ 산성명암지구 : 상당산성 테마로드 조성을 통한 명소화 및 명암저수지~어린이회관 가족놀이코스 개발
  - ▶ 미원낭성지구 : 옥화9경·미동산수목원·추정리 메밀밭·로컬푸드를 연계한 건강힐링체험 코스 조성
  - ▶ 가덕남일문의지구 : 청남대, 한계저수지 등 연계 순환형 관광 및 체험코스 개발

#### □ 기대효과

- 상권 활성화, 놀이 여가 생활 및 건강·힐링 증진
- 환경 그대로 활용한 친환경적 부가가치 창출

### ■ 이행절차 및 기간

- 24년부터 행정·주민협의체 등 논의 구조 신설하여 추진

## 관내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와 R&D 지원

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청주의 산업단지는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구는 산업과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상당구는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젊은 세대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아직 청주의 타 지역에 비해 공기가 좋은 편임
-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마련할 때는 친환경적 산업으로 공기 질을 유지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거주지 인근의 직장 유치로 주민들의 워라벨을 향상시키며, 향후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유치
- 이러한 산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기술 전환을 도모하여 청주와 상당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 정책목표

-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와 R&D 지원
  -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유치 및 상당구 소재, 이전 기업 대상 R&D 예산 지원
-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제조업 협업 지원
  - 일반 제조업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업무 협력으로 기술 전환 지원
- 지역인재 육성
  - 지역 내 청년과 기업 재직자 대상 기술교육 바우처 제공
  - 기업대상 청년인력 유지 지원금 혜택 부여

#### □ 기대효과

- 상당구 소재 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 4차 산업 선도 및 지적 생산력과 산업경쟁력 확보

### ■ 이행절차 및 기간

- 24년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및 행정·주민협의체 등 논의 구조 신설하여 추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지원 강화

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상당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부도심이 등장하며 상권의 분산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 됨. 청주의 대표 상권이었던 성안길은 최근 경제 한파까지 겹치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3%로 코로나19 시기 31.4% 공실률에 버금가고 있는 실정임 (2023. 4분기 기준)
-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 가계소득 저하에 따른 얼어붙은 소비도 원인임
- 지역현안 여론조사 자체 실시 결과, 원도심인 중앙·성안동 등에서는 ‘저층주거지 개발 및 주차시설 확충’,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요구가 주요하게 나타나, 주차시설 확충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 정책목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 간편 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 임대료 지원
  -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 빠른 내수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 □ 기대효과

- 골목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경감

### ■ 이행절차 및 기간

- 재정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관련 법 제·개정 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서승우)

<p>입법공약 1</p>	<p><b>도농복합(통합)도시 상생발전법 추진</b></p>
<p>내용</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수많은 도농복합시와 도농통합시가 생겨 났으며 청주시는 2014년에 청주와 청주가 통합되면서 도농통합도시로 전환</p> <p>통합 당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한시적 특별법의 형태로 다양한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상생발전의 기반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규모 부족했던 것이 현실</p> <p>또한 행정, 농촌지원, 지역개발관련 등 다양한 법의 규제 안에서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존공생하기에는 다양한 제약이 수반</p> <p>예를 들어 도시 내 농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 면 지역이 아니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관리해야하고 인프라를 만들어가야하는 행정력 부족 등을 들 수 있음</p> <p>따라서 지역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법률의 제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상생발전의 틀을 제공</p> <p>도농복합(통합)도시 상생발전법은 행정, 산업, 지역개발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통합 관리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의 폭을 확대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p> <p><b>■기대효과</b></p> <p>상대적으로 낙후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p> <p>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도시지역 인구분산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p> <p>도농복합도시의 자율적 성장 도모</p> <p>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행정 운영</p>

## 중부권 국가 관문 공항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청주국제공항은 1993년 김포공항의 포화와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97년 수도권 대체공항이 인천광역시로 확정되면서 청주공항은 신수도권 공항에서 지방 수준의 공항으로 전략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456m의 노선확장 및 민간활주로 신설 등을 통합한 청주국제공항 제2터미널 신설을 통해 통한 대규모 물류산업을 유치하는 물류경제권을 통해 청주공항과 물류산업을 연계하여 진정한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목표 수정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보다 현실성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 중심의 항공물류산업의 지역분산정책을 수립하고 청주지역의 미래발전 전략과 연동하여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로드맵 완성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예타면제, 군사공항 이전 등을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역세권개발에 마중물 마련

## 내용

## ■기대효과

중부권 국가공항으로 확장 추진

사통팔달의 육로 교통망과 연계해 중부권, 경기남부, 경상북도 등 신 항공물류의 핵심 축으로 부상

인천국제공항의 화물과 운동 물동량의 10%이상을 청주로 이동

- 청주공항 기회발전특구 지정

##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폐지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조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기를 거치면서 공동주택 가격이 통상 연 3% 수준에서 18%로 과도하게 상승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도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될 정도로 집을 가진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또한,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게 돼 있고 2억원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가 3배까지 오르는 등 서민부담을 급증하게 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시기에 어르신들의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급증함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폐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기대효과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행 60%수준으로 유지하여, 집1채를 가진 서민들의 주민세 등 각종세금을 비롯한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이고, 노년기에 서민들의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내용



<p>지역공약 <b>1</b></p> <p>내용</p>	<p><b>청주 용암역, 금천역 신설</b></p> <p><b>■현황 및 문제점</b></p> <p>청주 4개구 중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당구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가 청주 도심 통과로 확정되어 추진중이지만 청주 남부의 인구 집중지역인 용암, 금천, 분평 지역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져 이동시간 단축 혜택이 미약함 충청권광역철도 2호선 추진으로 주거집중 지역인 용암동(동남, 방서), 금천동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1. 1단계 : 청주 지하철 시대 조기 개막(공사기간 16년 → 11년으로 단축, 민자방식 도입) 2. 대전청사→세종청사→오송→상당공원→청주공항(L=67.8km, 기존(반석)보다 7km 연장) 총사업비 4.5조원(민간 50%, 국비 35%, 지방비 15%)으로 지방비 부담감소 민자추진으로 16년이상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5년정도 단축하여 2034년 완공 운영비는 민간운영사 전액부담 방식으로 진행, 청주시 운영예산 부담 해소</p> <p>3. 2단계 : 용암역, 금천역 신설 추진(충청권광역철도 2호선 추진)</p> <p>청주상당역과 신탄진역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 2호선 추진으로 청주 남동지역의 교통갈증 해소 청주 남부의 주거집중 지역인 용암동(동남, 방서), 금천동 지역에 역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공, 상당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4. 5. 1단계 2021. 7.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확정.고시(청주도심통과제외) 2021. 9. 충북대선1호공약으로청주도심통과충청권광역철도채택 2021.12. 청주도심통과충청권광역철도공약당시윤석열대선후보에게공식건의 2023. 6. 청주도심통과노선확정및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신청 2023. 9. 민간사업의향서접수(DLE&amp;C(옛대림산업)) 2024. 4. 민자적격성조사 <b>2029년착공 및 2034년완공목표</b></p> <p>6. 2단계 2022.12. 충청북도 철도망기본구상연구 용역착수 2023. 7. 국토부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착수 2024. 5.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건의(충북도→국토부) 2025. 6. 제5차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금천, 용암, 분평역 신설)</p> <p><b>■재원조달방안</b></p> <p>1단계 : 총사업비 4.5조원(민간자본 50%, 국비 35%, 지방비 15%) 2단계 : 총사업비 1조 4585억원 (국비 70%, 지방비 30%)</p>
------------------------------------	---

## 알아서 편리하게 스마트 상당

### ■현황 및 문제점

상당구에 있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통적인 문제는 주차 문제  
출퇴근 러시아워에 집중 주거지역에 발생하는 교통혼잡  
단기간에 증가한 인구로 여가시설 부재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7. "스마트 주차빌딩" 조성

주요상업지구 및 주차상습정체 구역에 "AI스마트 주차빌딩"을 조성하여 주차문제 개선  
플랫폼을 활용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 및 공영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지원으로 국비 지원범위 확대.

#### 8. "AI 스마트 교차로" 조성

주요 교차로에 "AI 스마트 교차로"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지원  
용암, 금천, 방서 등 주거집중 지구 등 주요 아파트 단지별  
편리한 교통환경(스마트 주차장, 교통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연계)을 구축.

#### 9. "스마트형 복합 문화시설" 확충

안심 공원 조성, 문화거리 및 문화공간 확충 등 동남·방서지구를 명품 신도시를 가꾸겠습니다.

#### 10. "AI 복합안심쉼터" 조성

관내 공원 및 체육시설, 버스정류장에 "AI 스마트 복합안심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접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상당구만의 쉼터 환경을  
조성.

내용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4. 8. 해당 사업별 연구 및 설계 용역 예산 확보
- 2025. 1. 해당 사업별 연구용역 착수
- 2025. 6. 해당 사업별 설계용역 착수 및 추진 예산 확보
- 2026. 1. 시범 케이스 발주 및 착공
- 2027. 1. 시범 케이스 성과분석 용역
- 2028. 8. 해당 사업별 년차 예산 확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스마트주차빌딩 조성 : 9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AI 스마트 교차로 조성 : 4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스마트형 복합 문화시설 : 6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AI 복합안심쉼터 :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청주농촌 재구조화 특화지구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촌지역의 낙후 여전  
농촌발전 정책들의 한계성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 논의 시점 도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주여건과 산업인프라  
정부 주도의 농촌발전 정책에서 지역 주도의 농촌발전 정책으로 전환 요구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1. 미원, 낭성, 남일, 가덕, 문의 5개 지역을 “농촌재구조화 특화지구”로 조성
2.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3.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7개 지구)

1. 농촌마을보호지구 2. 농촌산업지구 3. 축산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5. 농촌재생에너지지구 6. 경관농업지구 7. 농업유산지구

- 15.
16. 3.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책의 현실성 부재 극복

장기적으로 스스로 발전한 수 있는 역량 확보

단순 농촌지원 형식에서 벗어나 정주여건과 상권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인구 증가 등 농촌전반에 걸친 구조 혁신 기대

- 17.
18.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 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19.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단기적인 사업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방식으로 진행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 ■이행절차 및 기간

2023.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
2024.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
2024. 12. 사업지구 선정
2025. 1. 사업예산 집행

### ■재원조달방안

대상 사업별 최대 3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송상호)

<p>입법공약 1</p>	<p>기후정의 생태전환 기본법 제정</p>
<p>내용</p>	<p><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이상의 공허한 약속은 그만 (#NoMoreEmptyPromises).” 2021년 초 국제청소년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서 내건 캠페인 슬로건입니다.</li> <li>- 지금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기후는 공공재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의 나라, 소수의 계층, 소수의 기업이 탄소배출을 통해 이익을 독점해 왔습니다. 기후, 자연, 자원을 사유화한 결과가 현재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낳았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기후정의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 법이 기후정의 생태전환 기본법입니다.</li> <li>- 현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탄소감축 목표는 물론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등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li> <li>- 기후정의 생태전환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 기준에 적합한 나라로 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li> </ul> <p><b>■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정의 생태전환 문제에 대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li> <li>- 탈탄소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지역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li> <li>-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정부의 감축 목표를 강제할 수 있는 국가 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과 정책이 기후정의와 기후위기에 대응을 기준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li> </ul> <p><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p>

내용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한국 연간 실 노동시간은 21년기준 OECD 평균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을 넘어 주 69시간을 주장했습니다.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 시간 주권이 보장되지 않아, 스트레스 증가 및 가족과의 충분한 시간 확보 방해합니다.
  
- 임금삭감 없는 주 4일 노동제를 도입할 관련 법률들을 입법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주28시간 노동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놓겠습니다.

■ 기대효과

- 노동중독 사회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이 상승합니다.
- 노동시간의 축소로 전국민돌봄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시간 축소는 일자리 나눔 효과가 있어 실업문제 해결과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가사 시간은 여성 3시간 7분, 남성 54분으로 남녀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주4일제 노동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b>입법공약</b> 3	<b>아동·청년·노인·농민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b>
<b>내용</b>	<p> <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2023년 4분기 출생률 0.65 급격한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li> <li>-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로 부끄러운 1위입니다.</li> <li>- 연금 소득대체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li> <li>-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6.1%로 가장 높습니다.(미국 75.6%, 일본 57.2%, EU 58.3%, 중국 58.8%) 가계 경제가 벼랑 끝에 있습니다.</li> <li>- 현행 만 8세 미만 소득기준 없이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 일 경우 지급하는 수당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동, 청소년, 청년에게 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li> <li>-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li> <li>- 농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li> </ul> <p> <b>■ 기대효과</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5세 이상 인구 19% 973만 명, 만 10세 이하 인구 6.49% 332만 명, 만 10~30세 이하 인구 40.43% 1,738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보장과 경제살리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li> <li>- 저출생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li> <li>- 노인빈곤율과 노후불안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역소멸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li> </ul> <p> <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 </p> <p>       현 근로소득세 감면액 46.1조, 법인세 감면 30.5조 포함 76.6조 이 예산은 부자에게 유리한 분배        -&gt; 30세 이하 인구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시 지급당자 연 30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gt; 이후 경제규모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하는 만큼 연차적으로 증액가능합니다.     </p>

<b>지역공약</b> 1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b>내용</b>	<p> <b>■ 현황 및 문제점</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시는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 중 하나입니다.</li> <li>- 코로나 때 완화되었던 미세먼지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li> <li>- 충북은 대기정체지역(평균풍속 1.8m/s이하, 고도가 372m이하)으로 전국 최고(90.1%) 수준입니다.</li> <li>- 상당구는 낙가산, 갯대산, 우암산으로 막힌 분지지형입니다.</li> <li>- 청주시 초미세먼지 농도 자체 기여도는 11.5~21.3%이며 국외요인(중국 등)은 38.2~63.4%, 국내요인(충북 기타+국내 기타)은 25.1~40.5%로 분석되고 있습니다.</li> <li>- 청주 쓰레기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 2곳, 산업체자가처리소각시설 4곳, 민간 6곳입니다.</li> <li>- 청주는 전국 민간 쓰레기 소각 처리 용량의 18%, 충북은 3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li> <li>- LNG발전소 설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기후솔루션에 따르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이산화질소)에 의해 2064년까지 최대 1020명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li> </ul> <p> <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소각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합니다. 자기 지역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정책목표가 이루어지면 청주시 미세먼지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체 쓰레기량을 줄이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li> <li>- 산업단지에는 옥상태양광 의무화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는 미세먼지 저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li> <li>- LNG발전소 설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기후솔루션에 따르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이산화질소)에 의해 2064년까지 최대 1020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요원인을 제거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li> <li>- 도시숲 및 공유녹지 확대해야 합니다. 숲과 녹지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자연 공기청정기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휴식 공간도 확보된다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li> </ul> <p> <b>■ 이행절차 및 기간</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7월~12월. 현황 조사, 여론조사</li> <li>- 2025년 상당구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범지구 지정, 공청회·법안 마련</li> <li>- 2026년 지역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전국 소각장 배분, 지역협의</li> <li>- 2027년 이전 시작</li> <li>- 2024년 7월~2027년 6월</li> </ul> <p> <b>■ 재원조달방안</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석열 정부가 줄인 4,435억 원의 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과 기후대응 기금 709억 원을 복원하고, 1,332억 증액한 핵발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8,000억 원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30%를 충북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li>- 기후정의생태전환기본법 제정과 후속입법을 통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li> </ul>

<b>지역공약</b> 2	공군사관학교 비행장 이전
<b>내용</b>	<p> <b>■ 현황 및 문제점</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기준 이하라고 하지만 오전 오후로 3~4시간씩 비행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li> <li>- 동남지구, 방서지구가 들어왔고 지북동, 분평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예정되어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li> <li>- 2020년 6월 공군사관학교 소속 KT-100 훈련기가 남일면의 한 논에 불시착한 사례가 있습니다.</li> <li>- 소음문제와 비행기 추락 등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li> </ul> <p> <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훈련기 비행노선 변경해야 합니다.</li> <li>- 장기적으로는 공군사관학교과 협의하여 비행장을 이전해야 합니다.</li> </ul> <p> <b>■ 이행절차 및 기간</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7월~12월. 여론조사, 이전 비용 조사</li> <li>- 2025년 공군사관학교와 협의, 공청회</li> <li>- 2026년 이전 대상지 물색, 이전 희망지역 공모</li> <li>- 2024년 7월~2027년 6월</li> </ul> <p> <b>■ 자원조달방안</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노선 변경은 별도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li> <li>- 공군사관학교 비행장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li> </ul>



<p>지역공약 3</p>	<p>버스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p>
<p>내용</p>	<p><b>■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의 이동권은 필수공공재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분야입니다.</li> <li>- 전기-수소차는 결국 여유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이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li> <li>- 따라서 버스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li> <li>-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조사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설문에 따르면 불만족 62.6%나 됩니다. 불만족 사유로 배차 간격이 늘었다(57%), 노선축소와 환승 불만(52.4%), 이동시간 증가(31%), 콜버스(7.2%)로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밝혀졌습니다.</li> <li>-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 순환버스 중심으로 버스 노선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li> <li>- 3차 우회도로 순환버스 도입 및 상당구청 부근에 버스 환승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li> <li>- 마을버스(가덕문의, 낭성미원) 및 저상콜벤 버스 도입하겠습니다.</li> <li>- 군 단위 마을버스, 저상콜버스 도입하겠습니다.</li> <li>- 시내외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콜벤 2배 확대하겠습니다.</li> </ul> <p><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교통공공성과 탄소감축이 실현 가능합니다.</li> <li>- 군단위 면단위에 이동권이 보장됨으로써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li> <li>- 순환버스-마을버스 혼합형으로 교통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li> </ul> <p><b>■ 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7월~12월. 현황 조사, 여론조사</li> <li>- 2025년 버스노선 체계 개편안 마련, 공청회</li> <li>- 2026년 1월 개편노선안 시행 후 3개월 뒤 여론 수렴 후 개선안 마련</li> <li>- 2024년 7월~2026년 12월</li> </ul> <p><b>■ 자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와 충청북도, 청주시의 재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li> </ul>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우근헌)

지역 공약1	<b>청주공항과 오송역 접근 개선</b> - 국제공항 수준의 청주공항 육성 - 청주지하철(광역철도) 시대 조기 착수 지원 - 오송역과 청주도심 그리고 청주공항 도로 확보
지역 공약2	<b>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b> - 주차장법 개정으로 원도심 내 주차장 확보 - 주요도로 확대 방안 추진
지역 공약3	<b>상당구민을 위한 무심천 공원화</b> - 하상도로 위치 변경 - 상당구민 접근성 확보
지역 공약4	<b>청주시 스마트시티 활성화</b>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개선

입법공약 1.	<b>국회의원 연임제도 관련 제안 - 선거관련법 개정</b> - 다선 의원 정의 및 필요성 연구 등
입법공약 2.	<b>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b>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 -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거래 규제 강화 -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농지법 규제사항 완화 또는 폐지
입법공약 3.	<b>사실혼 인정 범위 확대 등 가족관계등록법 개정</b> - 변화하는 가족구성 단위의 인정 - 법률혼 외 다양한 법적으로 보호 받는 가족의 필요성
입법공약 4.	<b>공인중개사법 개정</b> - 중개보수 지급시기의 명문화 필요 - 실거래신고 기준일을 거래계약 잔금일로 변경 필요
입법공약 5	<b>형사소송법 개정</b> - 기소편의주의 재검토 필요 -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재검토 필요

지역공약 1. (3대공약)	<b>청주공항과 오송역 접근 개선</b> - 국제공항 수준의 청주공항 육성 - 청주지하철(광역철도) 시대 조기 착수 지원 - 오송역과 청주도심 그리고 청주공항 도로 확보
지역공약 2. (1대공약)	<b>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b> - 주차장법 개정으로 원도심 내 주차장 확보 - 주요도로 확대 방안 추진
지역공약 3. (2대공약)	<b>상당구민을 위한 무심천 공원화</b> - 하상도로 위치 변경

	- 상당구민 접근성 확보
지역공약 4. (	<b>청주시 스마트시티 활성화</b>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개선
	-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이광희)

입법공약 1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내용	<p>■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의함</li> <li>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li> <li>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li> </ul> </li> <li>「헌법」 46조에 따라 주민 소환을 가능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지역구국회의원</li> <li>발의 :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li> <li>가결 :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li> <li>제한 :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경우 소환 기간에서 제외</li> </ul> </li> </ul>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 민주주의 실현</li> <li>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성 강화</li> </ul>
입법공약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p>■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직 공무원 및 전문가와 같은 권력에 의한 범죄는 더 교묘하고, 피해가 크며, 사회적 신뢰자본에 큰 훼손을 끼침</li> <li>선진국의 경우 더욱 가혹하게 처벌을 하고, 전담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 운영</li> <li>우리나라도 2020년, 국민적 여망을 담아 공수처를 설치하여 운영</li> <li>한계 : 수사 인력 부족, 지능범죄 수사 전문성 부족, 수사관의 임기제 공무원 신분 에 따른 수사 연계성 단절과 정치적 중립 보장 필요성</li> <li>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의 실질성, 적시성을 확보</li> </ul>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 적시적 수사에 따른 처벌 가능</li> <li>범죄 예방 효과 및 사회적 신뢰 자본 회복</li> </ul>

<p>입법공약 3</p>	<p>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p>
<p>내용</p>	<p>■ <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은 허가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li> <li>- 산업폐기물처리업체는 돈은 벌지만 주민 피해 가중</li> </ul> </li> <li>• 허가 이후 영업 중단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임시 모니터링 과정이 없음</li> </ul> </li> <li>• 산업폐기물 업체와 주민 간 사회적 갈등 해결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개입 의무화</li> </ul> <p>■ <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 명시 : ‘발생지에서 발생자가 처리해야 한다!’</li> <li>• 산업폐기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해소</li> <li>•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책임 명시</li> </ul>

<p>지역공약 1</p>	<p>(공약명) 서원행정타운 조성</p>
<p>내용</p>	<p>■ <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의 편의성, 효율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권에 편중된 행정기관 이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구청 :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접근성 개선 요구</li> <li>- 병무청, 청주준법지원센터 : 이전 후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요구</li> <li>- 서원경찰서 : 신설 계획</li> </ul> </li> <li>• 행정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택지 조성 : 분평2지구(9천 세대)</li> <li>- 산업 단지 조성 : 남청주현도산업단지(30만평), 수열에너지단지</li> </ul> </li> </ul>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서비스 기관 집적에 따른 편의성, 효율성, 접근성 제고</li> <li>• 이전 적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구청 : 문화·예술·교육 공간</li> <li>- 병무청 : 청년 주거·동아리·창업 공간</li> <li>- 청주준법지원센터 : 분평동 복합문화시설</li> </ul> </li> </ul> <p>■ <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li> <li>• 사업 계획(2년) - 국비 조달(1년)</li> </ul> <p>■ <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부지 : 남이면 일대</li> <li>• 국비 조달</li> </ul>
--	---

지역공약 <b>2</b>	<b>첨단교육특구 조성</b>
내용	<p><b>■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 서남부권 개발의 걸림돌 - 지속적 이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는 서원구 중심에 위치 → 청주 서남부권 개발의 걸림돌</li> <li>- 인근 아파트 주민 조망권 침해</li> </ul> </li> <li>• 이전 적지 활용 방안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복합 개발 시 기존 청주교도소의 가치가 훼손 우려</li> <li>- 근대건축사적, 근대문화적 가치를 보존한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li> </ul> </li> </ul> <p><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을 고려한 활용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구 소재 5개 대학(충북대, 서원대, 청주교대, 카톨릭꽃동네대학, 방송통신대)</li> <li>- 주변 주거 지역과의 연계</li> </ul> </li> <li>• 대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 · 생태 · 문화 · 인권이 공존하는 공간조성</li> <li>• 청주교도소 신축 이전으로 재소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교정 실현</li> <li>• 근대건축물 위에 미래 건축과 AI 교육기술을 결합</li> <li>• 대학과 지역, 과거와 미래, 아이와 어른을 연결하는 허브</li> </ul> <p><b>■ 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청주시와 협조체계 구축</li> <li>• 주민 공청회 및 관련 기관 간담회 추진</li> <li>• 교도소 이전 부지 결정과 연계 추진</li> </ul> <p><b>■ 자원조달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비용 추정 :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 건립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소자 현원 기준 1인당 약 1억원 산출 + 토지매입비 등 기타사업비 약30% 추가</li> <li>- <u>1인당 약 1.3억 × 현원 약 1,880명* = 약 2,444억</u> 소요 예상</li> </ul> </li> <li>• 분평 2지구 개발에 따른 환수이익 + 기존 교도소 활용 부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li> </ul>

지역공약 <b>3</b>	<b>정원도시 서원- 사람중심도시 서원</b>
내용	<p><b>■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닌 ‘사람중심도시’ 전환 필요</li> <li>• 아파트 밀집 형태의 수익성 우선 개발 지양</li> <li>• 원도심의 재개발 시 고층화된 주거 환경의 변화 필요</li> </ul>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정원도시’ 서원구 전체 확대를 통한 삶 속의 생태 교육장 활용
- 도시정원사 양성, 민·관이 함께 정원을 만드는 협치 모델
- 녹지 조성 공동/개인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제공
- 세계 도시 디자이너가 찾는 생태 문화 공간 조성

■ 이행절차 및 기간

- 시범 사업 : 분평 2지구
- 신규 택지 및 재개발 지역으로 확대 적용

■재원조달방안

- 국비+시비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김진모)

입법공약

1

(공약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1. 입법 취지

##### 1.1. 중부내륙지역의 현황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격차 심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사회 유지 위협

##### 1.2. 기존 중부내륙특별지원법의 한계(미반영 조문) 개정

관계부처	미반영 조문 내용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재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기재부 외 6개	부담금 등의 감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적용 배제
국토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사용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에서의 규제 특례
환경부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에서의 규제 특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

내용

##### 1.3. 개정 필요성

중부내륙지역의 심각한 문제 해결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 정책 목표

##### 2.1.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개발 제한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 위한 인센티브 강화

투자 위축 및 지역 발전 저해 요소 제거

중부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촉진

##### 2.2.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지역별 특성 및 현황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 2.3. 기관 운영 및 시행 방안 강화

법 시행 및 평가 체계 개선

### ■기대효과

1. 중부내륙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4.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1. 입법 취지

- 1.1. 심각한 인구 위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 한국 인구는 2천만 명 아래로 추락
- 1.2. 기존 정책의 한계  
과거 인구 정책은 산발적이고 부처별로 이루어져 효과 미흡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체계 구축 필요
- 1.3. 인구부 설치 필요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정부 부처 설치 필요  
인구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마련 필요

2. 정책 목표

- 2.1. 저출산 대책 강화  
출산율 상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양육 부담 완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출산 장려 문화 조성
- 2.2. 고령화 사회 대비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 구축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사회 참여 확대,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
- 2.3. 인구 구조 개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 완화  
균형 잡힌 인구 구조 구축
- 2.4.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인구 문제 해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 사회 대비 및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 마련

■기대효과

- 3.1. 인구 정책 효율성 증대  
인구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정책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3.2. 저출산 문제 해결  
출산율 상승 및 인구 감소 추세 완화  
미래 사회 대비
- 3.3. 고령 사회 성공적 대비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 구축  
고령층 삶의 질 향상
- 3.4. 국가 경쟁력 강화  
인구 문제 해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 마련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내용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1. 입법 취지

- 1.1.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공급망 불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내 첨단전략산업 취약성 드러나
- 1.2. 기존 법률의 한계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지원 정책 마련 필요  
투자 확대,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지원 강화 필요
- 1.3. 개정 필요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가 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2. 정책 목표

- 2.1.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도 기업 육성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2.2. 공급망 안정화  
주요 핵심 전략물자 국내 생산 체계 구축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안보 강화
- 2.3. 국가 경제 안보 확보  
첨단 기술 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  
국가 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3. 기대 효과

- 3.1.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  
국내외 투자 유치 및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성장 촉진
- 3.2. 기술 개발 역량 강화  
핵심 기술 개발 및 자립도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도 기업 육성
- 3.3. 인력 양성 및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산업 성장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3.4.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경제 안보 강화  
주요 핵심 전략물자 국내 생산 체계 구축  
국가 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b>지역공약</b> <b>1</b>	(공약명) 청주도심철도 서원선 신설
<b>내용</b>	<p> <b>■현황 및 문제점</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원구에서 오송역(55분) or 청주공항(53분)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됨</li> <li>- 사직-모충 재개발지구 14,000세대, 분평2지구-장성지구 18,000세대등 인구유입에 대비한 대중교통망 신설 요구됨</li> </ul>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p> <b>1. 정책목표</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선 신설 7.8km, 분평역, 용암역, 동남역 설치</li> <li>- 청주도심철도 노선(오송~청주공항) 정차역으로 청주체육관역 설치</li> </ul> <p> <b>2. 기대효과</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구민들의 이동편의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li> <li>- 분평사거리에서 오송역까지 55분에서 20분으로 <b>35분 단축</b></li> <li>- 분평사거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에서 20분으로 <b>33분 단축</b></li> </ul> <p> <b>■이행절차 및 기간</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 광역철도 연계 청주시 발전 구상계획에 반영</li> <li>- '25.~ :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li> <li>- '26.~'34 : 중앙정부 행정절차, 공사추진</li> </ul> <p> <b>■재원조달방안</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조 800억(민자 5,400, 국비+지자체 5,400)</li> </ul>

**지역공약**  
**2**

(공약명) 도심개발공간 창조

**■현황 및 문제점**

- 청주교도소 입지가 서남부권 도시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교도소 인근 1km내 교육시설(7개) 및 주거시설(6만6천명)이 밀집하는 등 서남부권 정서적, 지리적 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
- 1970년대 후반 건립된 사직동 종합운동장의 시설 노후화 심각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1. 정책목표**

- 청주교도소,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 등 청주법무시설 3개소 이전
- 청주 종합스포츠컴플렉스 조성

**2. 기대효과**

- 교정시설 노후화, 과밀 수용 문제 해결
- 이전적지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서남부권 도시발전 도모
- 국제규격 및 공인시설 구축을 통한 국제대회 등 유치로 지역홍보 및 체육역량 강화

**■이행절차 및 기간**

내용

청주교도소 이전		청주종합스포츠컴플렉스 조성	
'24. 상	법무부 협의완료	'25. 하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24. 하	이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6.~'35	중앙정부 행정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사추진
'25. 상	사업계획서 제출(법무부)		
'25. 하	사업타당성 검토(국토연구원)		
'26. 상	사업계획 승인(기획재정부)		
'26. 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추진		

**■재원조달방안**

청주교도소 이전		청주종합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예산규모	2,000억 내외	예산규모	6,000억 내외
조달방안	공공투자 50%+ 민간투자 50%	조달방안	국비1,800, 도비2,100, 시비2,100
사업방식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b>지역공약</b> <b>3</b>	(공약명) 명품주거지역, 서원
<b>내용</b>	<p><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 위기 심각</li> <li>- 교육의 도시 청주의 위상을 제고</li> <li>- 성장이 멈춘 서원, 지난 20년간 낙후된 서원의 변화 필요</li> <li>- 교육과 일자리의 균형을 통해 미래도시의 본보기 제시 필요</li> </ul>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b>1. 정책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육</b> : 24시 돌봄체계 강화(만6세 이하)와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만3개월~만12세)</li> <li>- <b>교육</b> : 교육발전특구 신속추진, 학교통학로 전선지중화, 서원문화예술교육타운, 꿈나무수당 등</li> <li>- <b>주거</b> : 공공주택 총900세대 추가확보, 공공임대 확대, 도시재생, 경찰서, 소방서 등</li> <li>- <b>재개발 신속추진지원단</b> : 6개 지구, 14,000여 세대, 청주시, 재개발조합, 전문가그룹, 민간 단체 등과 지원단 구성 및 운영(직접 자문활동 수행)</li> <li>- <b>문화예술</b> : 서원둘레길, 주민생활체육공원, 서원키즈파크, 수변가족친화공간, 물놀이파크,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등</li> <li>- <b>일자리</b> : 혁신벤처펀드 100억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전도유망한 소상공인 육성</li> </ul> <p><b>2.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기 좋은 주거환경, 넘치는 일자리, 세심한 복지, 풍성한 문화예술교육이 있는 서원구</li> <li>-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서원구의 사회적 통합 강화, 서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li> </ul> <p><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28. : 각 사업별 추진계획 상이, 사업기획부터 예산확보까지 책임 완수</li> </ul> <p><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부처 공모(사업기획) 및 추진, 예산확보, 지자체 예산 반영, 벤처캐피탈 유치 등</li> </ul>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이연희)

<p>입법공약 1</p>	<p>(공약명)생명안전기본법 제정</p>
<p>내용</p>	<p><b>■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취지)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생긴 참담한 사건으로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li> <li>- 이와 함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기관이 책임을 회피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li> </ul> </li> <li>○ (주요 내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참사 및 재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 상황에서는 재난 및 참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li> <li>- 재난 및 사회적 참사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사 및 진상규명 등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li> </ul> </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li> <li>○ 재난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사 및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및 정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 강화</li> </ul>

<b>입법공약</b> <b>2</b>	<b>(공약명)출생기본소득법 제정</b>
<b>내용</b>	<p><b>■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취지)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기피 및 출산기피로 인한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0.65명으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li>-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및 삶의 질 제고 관점에서 종합대책 마련 필요</li> </ul> </li> <li>○ (주요 내용) 출생기본소득법 제정을 통한 출생소득 종합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과 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시 무이자+원금50% 감면, 셋째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li> <li>• 주거지원: 2자녀 가구 24평형, 3자녀 가구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li> </ul> </li> <li>-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및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li> <li>- 자녀 성장 및 자립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아이 키움카드 :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li> <li>• 우리아이 자립펀드 :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부모 월 최대 10만원 입금가능, 성인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li> </ul> </li> </ul> </li> </ul> <p><b>■기대효과</b></p> <p>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 완화 및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p>

<p>입법공약 3</p>	<p>(공약명)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국가 지원 의무화</p>
<p>내용</p>	<p><b>■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b></p> <p>○ (입법취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효과 극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화폐는 국민들 호응 높고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li> <li>- 이러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필요</li> </ul> <p>○ (주요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국가 지원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의무화</li> <li>- 전년대비 지원총액을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전년 지원총액의 5% 이상 범위에서 증액하는 규정 신설 및 증액 금액이 50조원 달성 시 해당 규정 폐지</li> </ul> </li> <li>- 지역화폐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조 규정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정부’ 포함</li> <li>• 특별회계(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을 재원으로 활용) 신설 등 재원 모색</li> </ul> </li> </ul> <p><b>■기대효과</b></p> <p>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비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및 지역내 소비 활성화와 연계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및 지역상권 회복</p>



<b>지역공약</b> <b>1</b>	<b>(공약명) 청화대 청주 이전</b>
<b>내용</b>	<p><b>■현황 및 문제점</b></p> <p>○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역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현재 총 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9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인구감소로 인해 기업 이전, 주택 가격 하락, 공공서비스 부족 등 소멸이 심화되고 있음.</p> <p>○ 현재 정부부처는 세종에, 국회·청와대는 서울에 있어서 정책 생산 및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국회·청와대 등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이전해야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함.</p> <p>○ 국민의힘은 수도권 집중화 심화, 지역 소멸 등 문제 시급에도 불구하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걸고 있음.</p> <p>○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 시급한 대책 필요</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정책목표)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p> <p>(기대효과) 청와대 청주 이전을 비롯한 수도 이전 완성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임. 청와대 이전 및 수도 이전 완성을 통해 충청권에 600~700만의 메가시티가 조성된다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소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임.</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왜 청주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만드는 일로 청와대 청주 이전 공론화        청와대 이전은 세종, 청주 두 곳이 가장 유력함.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가 최적지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임.</li> <li>- 2단계: 수도이전 대해 다시 한번 현재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내려왔음. 수도이전에 대한 현재 판결은 이미 20년이 지났음으로 위헌 여부 재심판을 청구가 필요한 시점임.</li> <li>- 3단계는 관습헌법의 명문헌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관습헌법의 개정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 재적인원의 2/3 찬성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수도이전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 추진하겠음.</li> <li>- 4단계는 4기 민주당 정권 수립</li> <li>- 5단계는 국정과제 채택</li> </ul> <p><b>■재원조달방안</b></p>

<p>지역공약 2</p>	<p>(공약명) 오송참사 국회 국정조사 실시</p>
<p>내용</p>	<p><b>■현황 및 문제점</b></p> <p>○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생긴 참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있는 모습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참사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23.7.27.)</li> <li>- 시민사회단체, 김영환 충북지사 및 최고책임자 검찰 고발 (23.7)</li> <li>- 정부 국정감사 실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책임 회피 (23.10.10)</li> <li>- 시민대책위, 행복청장,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23.10.20.)</li> <li>-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참사 최고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 (24.2.5.)</li> <li>· 검찰이 한번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피해자의 당연한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li> <li>- 오송참사 유가족 생존자 시민, 3번째 국정조사 촉구 (24.2.14.)</li> <li>· 국정조사실시, 중대시민재해 기소,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촉구</li> </ul>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정책목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p> <p>(기대효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으로 향후 비슷한 사회적 재난 예방</p>

<p>지역공약 3</p>	<p>(공약명) 청주페이 발행규모 6,000억원으로 확대</p>
<p>내용</p>	<p><b>■현황 및 문제점</b></p> <p>(현황) 청주의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성과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고 청주시 자체 평가에서도 매출액이 87%나 성장</p> <p>(문제점) 청주의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21년도 188억원에서 23년도 기준 52억원으로 72%가 넘게 줄어든 결과 발행규모가 5,139억원에서 826억원 줄어 4,313억원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올해 발행규모도 2,9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정책목표) 청주페이 발행규모를 6,000억원까지 확대</p> <p>(기대효과) 청주페이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달성</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청주페이 발행규모는 임기내 매년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형태로 진행</p> <p><b>■재원조달방안</b></p> <p>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1조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 지원예산에서 청주페이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p>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김동원)

<p>입법공약 1</p>	<p>(공약명)지역 인재 의무 고용 40% 할당제 법제화</p>
<p>내용</p>	<p>■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시행중인 이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법인 ' 혁신도시법 ,(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채용법 ) 의 개정, 비율 상향 조정( 40%로 확대)</li> <li>*지역인재 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li> <li>- 인센티브 수혜 대상인 대기업 지역 공장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40%를 할당하는 관련법의 법제화(혁신도시법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수혜 기업에 대한 ' 지역인재 의무 채용법 ' 입법화 추진</li> <li>- 지역인재 의무 고용 40% 할당제법과 동시에 관련법인 ' 지역균형 발전법 개정 법안 ' 도 동시에 발의 추진하여 국책사업인 ' 이민청 ' 청주 유치 적극 추진</li> </ul>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 및 충북 지역 공공기관 이전 추가 유치를 통한 지역 인재 고용 확대</li> <li>- 이민청 유치는 이민청에 근무하는 상근 직원만 450여명 이고,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1500여명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 됨</li> </ul> <p>※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p>

내용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청주 산업 단지 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주산단 반도체 산업 특화 단지 및 구조 고도화 특별법’ 입법 추진
- 반도체(SK하이닉스) 차세대 랜드 메모리 제조, 실증화 기반 구축 특화 단지로 육성
- 청주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 친환경 산단’으로 구조고도화를 추진 하고, 일부 노후 시설 업종은 외곽 산단으로 이전을 추진 하여 첨단 지식산업센터로 재정비
- 흥덕구는 총 12개의 산업단지가 입지 또는 조성중으로(청주시 전체 산업 단지의 40% )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역 산업 단지로 개발 필요성

■ **기대효과**

- 반도체 산업 특화 단지 및 구조 고도화 특별법 입법 추진을 전후방 관련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부 노후 업종 시설 이전으로 친환경 산단으로 육성하여, 산단 인근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의 악취, 공해, 소음 등 환경 민원 해결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내용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2배 이상 벌어진 대.중소기업 근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 세제 우대책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 조건 개선 및 우대책 등 기존 「중소기업 근로 청년 지원 」 정책 내용 확대, 보완 하는 관련 법제도 정비
- 중소기업취업자(청년) 소득세 90% 감면 제도 연장 (현 5년 → 변경 10 년)
-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 중앙당공약 )
- 엄마, 아빠 육아휴직 법제화 , 의무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중앙당공약 )
- 육아기 유연근무를 위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 아침형 유연근무제 의무 도입( 8시 출근, 4시 퇴근) 과 주 2회 집에서 일하는 ' 재택근무제 ' 권장

■ 기대효과

- 양육 환경 개선 및 부담 완화,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마련
- 청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대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p>지역공약 1</p>	<p>(공약명) <b>삼성바이오로직스 흥덕 오송 유치</b></p>
<p>내용</p>	<p>■ <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 '글로벌 혁신특구' 에 걸맞는 ' 규모의 경제 ' 확대 방안 필요</li> <li>- 중소벤처기업부는 흥덕 오송지역을 지난 2023.12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한 바 있음</li> <li>- '글로벌 혁신특구' 는 첨단 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 허용, 원스톱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등 국제기준에 맞춘 전면적인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 )가 적용되는 지역임. 이로 인해 기업들은 첨단기술 혁신,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음</li> <li>- 규모의 경제 실현과 글로벌 경제특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TOP기업 유치 필요성 큼 또한 ' 오송 글로벌 혁신특구'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는 꼭 필요</li> <li>-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기준 연간 매출 3조2천억, 영업이익 1조1천억을 달성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임. 2032년까지 7조5천억을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동 기업은 인천 송도 공장에 이은 제 2의 공장 캠퍼스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 흥덕 오송 바이오특구 ' 지역은 삼성바이오 추가 공장 증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임</li> <li>- 이미 식약처등 의약, 보건, 의료 기관 6개 국책 기관과 KTX 고속철 분기점 오송역 등 탁월한 교통 인프라는 삼성바이오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요인 임</li> </ul>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전, 후방 파급 효과를 살펴 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유발 효과 : 약 5조 7000억원 (중간재, 원자재 산업 등 직간접 유발 효과)</li> <li>* 고용 창출 효과 : 2만 7,000명, 직접 고용 3,000여명 추산 ( 삼성바이오 송도 4공장 투자 규모 , 연면적 7만평, 연간 생산 24만L 기준 추산/ 삼성측 내부 전망 자료 인용 )</li> </ul> </li> <li>- 정책목표는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충북도(청주)지역 인재 「40% 의무 고용 할당제」를 도입 하고,</li> <li>- 청주 흥덕 오송을 바이오의약품 · 헬스 · k-화장품 단지와 금년 2024.12월 완공 예정인 마이스(MICE) 전시 시설 오송컨벤션센터,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제회의 · 학술대회 명소인 「 글로벌 바이오 산학연 포럼 국제도시 」로 육성 할 계획임. 세계적 국제민간회의인 도시인 ' <b>스위스 다보스 포럼</b> ' 처럼 육성 포부를 갖고 있음</li> </ul> <p>■ <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년의 중기 목표로 갖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충북도, 청주시 등 지자체와 삼각 편대를 구성하여 인센티브 제도 등 투자 유치 설명회, 해당 기업 경영진과의 주기적 상호 협의</li> </ul> <p>■ <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보유 투자 부지 저가 공급 및 취득세 등 조세 특별 지원</li> </ul>

###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청주권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에만 100%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정류장 정차, 교통혼잡으로 인한 정체 등 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임.
- 더욱이 수도권행 고속철 이용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은 시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 짐( 도심지에서 승용차 기준 오송역까지 40분, 시내버스 50분 소요)
-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85만명이 거주하는 청주시는 인근 도시인 천안시( 인구 65만명 )가 전철 3개역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도심 통과 철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청주 지역은 철도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 상태 임.

###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청주 도심 통과 1호 정차역인 가경터미널역을 주변 고속, 시외버스 정류장과 대형 쇼핑문화시설을 접목해 ' 지하철 역세권 쇼핑 , 문화 복합 중심지 ' 로 육성할 계획 임.
- 또한 전국 교통물류 X축의 중심지인 KTX 고속철 오송역과 도심 진입 제 1호 ' 가경터미널역 ' 을 양대 허브(hub)축으로 하는 ' 충청권 메가시티 거점 지역 ' 으로 발전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 ' 충청권 광역 메가시티 ' 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할 것 임.
- 도심 통과 지하철은 무엇보다 도심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소비 인구의 이동 편의성 획기적 개선으로(청주 도심 도청 기준 오송역 16분, 청주공항 12분) 정차역 주변 상권이 크게 활성화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됨.
- 이밖에 도시 계획 및 발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도시 고밀도 계획의 향상'이 기대 되며 인근 도시에서 이주해 오거나 일자리를 찾아오는 구직 인구, 관광객이 유입되어 인구 증대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음.

### ■ 이행절차 및 기간

-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교통기반이 될 본 사업은 2028년 착공해 2034년에 개통될 예정돼 있으나, 현재 민자도입 타당성 완성시 착공 및 개통이 더욱 빨라질 예정임.

### ■ 재원조달방안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대전 반석역 - 세종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 56.1 km ) 은 국비 2조 9천억, 지방비 1조 3천억원 등 4조 2천억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 임.

-단, 민자 유치로 건설 추진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민간이 사업비 50% , 운영비 100% 부담)



(공약명) 청년 임대주택 건립 및 청년 복합 시설 공간 설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층 창업 기업의 판로 확대 애로, 군복무 제대 청년의 사회 정착 진로 고민 , 고립·운동 청년의 사회 복귀 문제, 주거 사다리 지원, 취업, 결혼 등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 청년 사회 정착 가이드센터 '를 설립 필요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봉명동 전)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와 현, 군 유희부지인 강서예비군 훈련장 일부 부지에 청년 임대용 주택 단지건립을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 청년 창업 지원 공간, 4차 산업 (AI,코딩)직무 능력 교육 센터, IT비즈니스 공간 등 청년복합 합시설 개발 추진
- 청년 예술인 창작 활성화 촉진을 위해 온,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공간인 ' 청년 예술인 문화 마켓 , 을 본 청년복합시설에 설치, 공공 예산 지원으로 운영

■ 이행절차 및 기간

- 현 봉명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신축 시설인 옥산면 오산리로 2025.12월 준공 후 본격 이전 계획(청주시 계획)
- 구)봉명동 부지는 사전 설계 공모 등 관련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청년복합시설공간 으로 태어나도록 정책지원과 입법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계획 임.

■ 재원조달방안

- 국비와 도예산 지원금 등 지방비 최대 활용 계획 임.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김기영)

입법공약  
1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현재의 5년 단임 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끌었던 전두환과 김대중·김영삼·김종필(3김)의 합의로 정해졌으나 책임정치의 실현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소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을 뽑기 때문에 사표가 많고, 지역감정 조장의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내용

### ■ 기대효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할 수 있으며, 책임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선거구제로의 법 개정은 지역감정 해소와 의식의 쓸림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여야 및 소수정당에서도 당선자 배출로 지역당 구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념에 따라 전국 정당화가 가능하며 중선거구제도의 장점이 지방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내용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현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할 경우, 상속세의 부담으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세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상속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50억까지는 면제해 주는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이렇게 개정이 되면, 소기업·중소기업·가계기업이 승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고용창출의 안정성이 담보됩니다.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작금의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조로 50년 후 국가 존망의 귀로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출산문제는 출산, 양육, 주거 등 여러 방면에서 젊은이의 행복추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적 대명제인 국가존립을 위해서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 ① 국가에서 고등학교 졸업시 까지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
- ② 양육시설 : 기존의 사설유치원, 폐교의 활용으로 시설투자비를 절감하고,
- ③ 돌보미 : 50~60대 여성의 파트타임 알바로 해결 가능.
- ④ 주거문제 : 결혼하면 15~17평형의 아파트를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해 준다.

### ■ 기대효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b>지역공약</b> <b>1</b>	<b>사직동 일원 공공체육시설 이전 추진</b>
<b>내용</b>	<p> <b>■ 현황 및 문제점</b> </p> <p> 문광부는 2021년 공공체육시설의 균형 배치 및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목표 면적 기준을 5.73㎡로 설정하였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2.4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청주시 사직동 일대의 공공체육시설인 청주종합운동장, 야구장, 청주실내체육관 등은 1970년대 말에 준공하여 현재 약 45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축물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8년 육상시설의 공인인증에도 탈락하여 공식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대회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전국 단위 규모의 체육 행사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p> <p> <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p> 따라서 청주시 사직동 일원에 위치한 상기 공공체육시설을 흥덕구청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근 대전시의 경우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2025년에 개관할 예정이며, 충주시의 경우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충주종합경기장을 마련하였고, 천안시, 김천시 등도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스타디움을 건립하였습니다. </p> <p> 이에 청주시도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미래지향적인 규모로 도시 외곽지역인 흥덕구 흥덕구청 부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 지역은 우수한 사업성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건립에 커다란 난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의 체육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고 청주시 외곽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우수한 체육시설을 가지고 프로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에 공헌, 우수인재의 발굴,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의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를 연고로 한 여자프로 농구단 KB스타스 및 2부리그 청주FC 축구단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p> <p> <b>■ 이행절차 및 기간</b> </p> <p> 이행절차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청주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 지역에 부지확보를 통하여 최소한 2026년에는 착공하여 2030년 이전에 건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p> <p> <b>■ 재원조달방안</b> </p> <p>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동반되므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건립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지역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역발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자발적인 기부 및 후원과 아울러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p> <p> 즉, 정부예산 및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자체 예산 그리고 지역소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후원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프로구단을 유치하여 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참여토록 합니다. </p>

<b>지역공약</b> <b>2</b>	<b>흥덕지구 첨단 스마트팜 조성 확대</b>
<b>내용</b>	<p> <b>■ 현황 및 문제점</b> </p> <p> 2020년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소비트렌드는 2030세대의 젊은층 소비의 증가, 건강 중시, 과일 및 과채류의 증가, 간편 소비, 먹거리 구매장소의 다양화 등의 트렌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는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보다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국산 농산물의 선호도가 33.5% 이상 높아지면서 국내산 소비 확대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비닐하우스 등에서 시설작물이 재배되어 왔으나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고,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p> <p> 이에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전천후 농업이 필요한 실정이며, 농촌지역의 인력난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노지 및 스마트팜 시설의 설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p> <p> <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p> 충청북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충북 옥천의 터널에 실내 농장을 구현하여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실내 농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농업인과 청년 농부 그리고 귀농인의 스마트팜 영농사업 진입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 <p> 2025년에 흥덕구 옥산면 일대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인근지역인 오송, 강내, 옥산 지역 일대에 스마트팜 단지를 건설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시너지효과를 노리고자 합니다. </p> <p> 이를 통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p> <p> <b>■ 이행절차 및 기간</b> </p> <p> 현재 스마트팜 사업에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농협의 경우 독자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지역 내외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흥덕구 농촌지역인 오송, 강내, 옥산 지역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이룩하겠습니다. </p> <p> <b>■ 재원조달방안</b> </p>

<b>지역공약</b> <b>3</b>	<b>소외없는 복지특구 흥덕 건설</b>
<b>내용</b>	<p> <b>■ 현황 및 문제점</b> </p> <p> 현재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아 향후 소멸될 국가로 낙인이 찍혀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 주거문제 등이 겹쳐져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p> <p> <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p> 출산을 향상 및 유아돌보미 정책 : 자녀 양육의 지자체 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보육환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유희인력 활용을 통하여 유아돌보미사업을 운영하며(기존의 초등생 대상의 돌봄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별개), 도심지역의 경우는 기존의 돌봄제도 운영합니다. </p> <p> ① 흥덕구민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② 15~17평형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신혼가정 및 노인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③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특화된 생활체육시설을 건립 </p> <p> 출산을 향상에 기여하고, 젊은 부부들이 자녀의 양육 걱정 없이 맛벌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 <p> <b>■ 이행절차 및 기간</b> </p> <p> ① 유아돌보미 사업의 경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흥덕구의 경우, 분리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도심지역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이용료 일부를 보조하고, 농촌지역의 유아돌보미사업은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p> <p> ②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아파트의 건립으로 양분될 수 있으며, 민간 건설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p> <p> ③ 어린이 및 노인을 위한 특화된 체육시설의 건립은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을 흥덕구청 인근으로 이전 건립하여 동 시설에 부설하여 추진합니다. </p> <p> <b>■ 자원조달방안</b> </p>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송재봉)

<b>입법공약</b> <b>1</b>	「법원조직법」「검찰청법」 일부개정
<b>내용</b>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인들의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책임 방안 도입</li> <li>- 엄격한 수사·기소권 분리로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위함</li> <li>- 판사와 검사에 대한 견제기능 소실</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조직법」「검찰청법」을 개정하여 판·검사 임용에 국민참여 시스템 도입 (검사장급 직선제 도입 포함)</li> <li>-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li> <li>- 검찰이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li> </ul> <p><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p>



<b>입법공약</b> <b>2</b>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
<b>내용</b>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으로 지역경제 피해화</li> <li>- 서민과 중소기업자들이 겪는 금융배제 및 자금조달 기회의 차별로 인한 부의 불평등 심화</li> <li>- 지역금융기관의 수입 및 일자리·노동력 유출로 지방소멸 및 지역경제 붕괴위기</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li> <li>-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li> <li>- 서민과 중소기업자의 금융배제 해소</li> <li>-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재정 민주화 및 재정 분권 실현</li> <li>- 공공정책의 공백 최소화 및 신속한 추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li> <li>-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강화</li> </ul> <p><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p>

내용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지역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이 미비함
- 원도심의 낙후 및 도심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심의 중심역할을 부여하고, 지역 및 세대·계층을 고려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원도심 소규모 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방안 마련
- 개발 정체 및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상권 쇠퇴를 막고, 지역 경기침체 해소

■기대효과

- 맞춤형 생활도시계획으로 아파트 단지와 차별 없는 마을 완성
-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지역 등 생활기반 소외지역 중심으로 주차장·공원·도서관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여가시설에 우선 투자
-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유입,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기 활성화
- 건설경기 침체 등에 선제 대응
- 도시 환경 개선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p><b>지역공약</b> <b>1</b></p> <p>내용</p>	<p><b>충청권 메가시티 실현</b></p> <p>■<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권 집중 육성 필요</li> <li>- 청원은 청주국제공항 이외에도 수도권 내륙선,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예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으로 도약</li> <li>- 청주는 국토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관·물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충분한 공항경제권 조성 가능</li> <li>- SKT·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 충청권 4개 시도와 UAM 업무협약 체결(2023.10.25.)에 따른 구체적 로드맵(노선 발굴, 서비스 개발, 시범사업 추진 등) 마련 필요</li> </ul> <p>*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축으로 도약</li> <li>- 에어로폴리스 조기 완공 및 활성화 위해 쿠팡·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물류센터 유치 통해 3년간 3,0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1천억~1조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 기대</li> <li>-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는 한국 사업 확대를 위해 3년간 11억달러(1조4471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국내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대규모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 예정</li> <li>- (30분 생활권 조성) 청주국제공항과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 내륙선, 동서횡단철도 등 충청권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조속 구축하여 30분 생활권 조성,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발돋움</li> <li>- (UAM 인프라 확보) 청주국제공항을 UAM특화단지로 조성해 미래항공산업의 중추로 육성. 2040년 국내 UAM 시장규모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1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23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11조원의 부가가치창출 전망</li> </ul> <p>- <b>교통·물류·항공 산업의 시너지를 증대하여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도약</b></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비전별 연차별 목표설정 후 임기 중 지속 추진</li> </ul> <p>■<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비 투입 및 국비 보조</li> </ul>
---	--

<p>지역공약 2</p>	<p>ESS 신산업 메카 조성</p>
<p>내용</p>	<p>■ <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년 세계 ESS 산업의 시장성은 2,620억 달러(한화 347조 원 규모)임</li> <li>- ESS의 핵심 시장인 미국은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ESS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2022년 대비 2030년에는 약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음</li> <li>- 유럽의 리튬 이온 ESS 시장은 2022년 197억 달러에서 2032년 940억 달러로 연평균 16.9% 성장할 것으로 전망</li> <li>- 청원에는 ESS를 주도하는 앵커 기업(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해 있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우위</li> </ul>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신성장 미래먹거리 사업을 청원에서 주도</li> <li>- 에너지 효율 및 환경문제 동시보완</li> <li>- 지역내 고용창출, 지방세수 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li> </ul> <p>■ <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임기 중 지속 추진</li> </ul> <p>■ <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별 주요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li> <li>- 인프라 개선, 부대시설 필요 시 지방비 및 국비 보조</li> </ul>

<b>지역공약</b> <b>3</b>	<b>서민을 위한 지역공공은행</b>
<b>내용</b>	<p><b>■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과 중소기업자들이 겪는 금융배제 및 자금조달 기회의 차별로 인한 부의 불평등 심화</li> <li>- 지방소멸 위기의 심화로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수입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li> <li>- 당장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산업전환을 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없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공익 목적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li> <li>-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불평등, 지역소멸 위험, 기후위기를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이며, 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li> </ul> <p><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 학생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에게 각종 금융혜택 제공</li> <li>- 공공정책의 공백 최소화 및 신속한 추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li> <li>-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지방소멸 극복</li> <li>-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지자체 재정 민주화, 재정 분권 실현</li> </ul> <p><b>■ 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사례(미국 노스다코타 은행 등) 참고하되, 한국적 구조에 맞는 대안 마련</li> <li>-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거쳐 지역공공은행 설립 관련 주요 쟁점(설립형태·요건, 예금 부보방법, 사업 범위,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 해소</li> <li>-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가칭) 대표발의</li> </ul> <p><b>■ 자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김수민)

<p>입법공약 <b>1</b></p>	<p style="text-align: center;"><b>“뉴시티 for 청원구”</b></p>
<p>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청주국제공항역 중심 역세권 개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주공항 일대를 새로운 신경제생활권 조성의 중심축으로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공항의 이점을 살려 업무,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li> </ul> </li> <li>2) 「<b>청주국제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b>」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li> </ul> </li> </ol> </li>   <li>2. <b>주국제공항 인근에 글로벌 항공 물류 거점지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산업에 특화된 에어로폴리스 지구를 조성 개발.</li> <li>- 옥송-옥산-오창산단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융복합 벨트와의 연계사업 지원</li> </ul> </li>   <li>3. <b>공항 배후도시 육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창지역 네오테크노밸리를 신속히 조성하여 공항배후도시로 자리매김!</li> </ul> </li>   <li>4. <b>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오창테크노폴리스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li> <li>2) 청주 네오테크노밸리 신속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li> </ol> <p>→ 10만 자족도시 오창으로 도약</p> </li> </ol>

<p>입법공약 <b>2</b></p>	<p><b>대한민국 교통의 허브, 청원!</b></p>
<p>내용</p>	<p><b>1. 누구나 오디서든 오기 쉬운 청원</b></p> <p>1) ‘수도권 30분대 시대 개막’ 동탄-청주공항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 및 수서-청주공항 중부내륙철도 사업 추진</p> <p>2) ‘청주에도 지하철이’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북권 광역철도(CTX) 사업 조기 착수(내덕역, 성모병원역, 청주국제공항역, 오창역 신설 추진)</p> <p>3) 서산에서 출발하여 청주를 지나 울진으로 횡단하는 ‘동서횡단철도’ 오창역 신설 반영 추진</p> <p>4)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 작업 추진</p> <p><b>2. 사통팔달 도로교통</b></p> <p>1) 우선 출퇴근 만성 교통정체 구역 무심동로-오창IC 도로 조기 준공</p> <p>2)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6축(서울(강일), 진천, 합천), 동서 5축(천안, 오창, 증평)을 통해 청주 북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 확보</p> <p>3) 영동, 오창고속도로 조기 착공</p> <p>4) 청주시청-북이-증평도안 연결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 조기 완공</p> <p>5) 세종시(행복도시)와 청주공항 연결도로 구축</p> <p>6)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서청주-증평 구간 조기 착공</p> <p>7) 오송,오창,진천 연결‘충북서부축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p>

교육의 표준을 선도하는 교육도시 청원!

내용

1. 「국제교육과정 표준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

IB 시험 하나만 봐도 국내대학 지원은 물론, 해외 우수대학인 하버드대, 동경대, 북경대 등도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 임기 내 IB 프로그램을 국내 대학 입시에 연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2. 「기업형 바이오헬스케어 특목고(또는 자사고) 설립」을 통한 지역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 설립되는 특목고 또는 자사고의 지역 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보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지역공약 1	지역별공약(오창읍)
내용	<p><b>[오창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장, 매립장 신설 및 증설 결사 반대</li> <li>○ 오창2산단 내 오창중학교 신축 이전 추진</li> <li>○ 반려견 놀이터 건립</li> <li>○ 문화가 함께하는 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복합문화시설 건립(오창호수공원 일대)</li> </ul> </li> <li>○ 무심동로 ~ 오창IC 조기완공</li> <li>○ 반도유보라 더샵 롯데캐슬 등 아파트단지 연결하는 육교 신설</li> <li>○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열람실, 전산, 스테디룸 등</li> </ul> </li> </ul> <p><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p>

내용

**[북이면]**

- 스마트팜 농업특화단지 조성
  -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창업농업인 육성
  - 스마트농업 관련 전·후방 기업체를 유치
- 시골마을 행복택시 및 청주 콜버스 서비스 강
  - 농촌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

**[내수읍]**

- 체험형·체류형 관광 산업육성
  - 드라마, 영화, 웹툰 스튜디오 촬영지 조성
  - 초정지구 K-푸드 미식벨트 조성
- 내수체육공원 에어돔 축구장 조성
  - 야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조기 완공

**[내덕1, 2동]**

- 내덕성당 ~ 밤고개 유흥업소, 빈집 정비사업
- 청주농고 디지털농업 교육 시범 모델 선정
- 행복주택 건립 시 도시가스 배관연결 추진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지역별 공약(오근장동, 율량.사천동, 우암동)

[오근장동]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 미호천 일대 체육·여가(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 확대
- 항공기 비행소음 보상 확대
-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확대 조성
  - 자연 경관이 함께 하는 지역 랜드마크 휴식공간으로!

[율량.사천동]

-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율량사천 청주여중 인근 부지)
- 율량사천동구시가지 주차장 및 공원 내 공공화장실 설치
- 대원 4차, LH9단지, 제일풍경채, 인근주택단지 추가교량 설치 조기 추진
- 동청주세무서 앞 대원칸타빌 4차 아파트 방향 우회전 도로 확장

내용

[우암동]

-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 청주대학교 주변 상권 활성화
- 청년·시니어가 공존하는 ‘세대공존특구’ 지정
  - 스마트 의료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도입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김경욱)

입법공약 1	(공약명)주 4.5일제 법제화
내용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및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점진적인 4.5일제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일수 및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보다 효율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 및 처우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근로체계를 만들고자 함.</p> <p><b>■기대효과</b>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회원국 전체 38개국 가운데 33위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곧 노동의 시간에 비해 생산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따라서 해당 정책을 통해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타성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기업문화 등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노동시장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p><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p>

<b>입법공약</b> <b>2</b>	(공약명)작은정원 특별법 제정
내용	<p> <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          독일의 작은정원인 '클라인가르텐'을 모델로 한 한국형 작은정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지 10분 이내에 지자체가 유휴 부지를 개발해 누구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농지를 임대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농업 기회 제공으로 여러 현대 사회적 문제 역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작은정원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세부 내용 수립과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임.       </p> <p> <b>■기대효과</b>          여러 생활 인프라, 경제, 교육 등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도심 집중화되어 있는 현재, 시민에게 도시농부의 삶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개인 및 가족공동체의 소통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 치유농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더욱이 충주시의 경우 개인의 토지 보유율이 약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나 저렴하게 토지를 임대받고 이를 가꿀 수 있도록 해 많은 시민에게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제공할 수 있음.       </p> <p> <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 </p>

입법공약  
3

(공약명)초등학교 급식단가 상향평준화

내용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현재 초등학교 내에 급식비 평균 단가는 광역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4,098원)과 가장 낮은 지역(3,390원)의 격차는 약 7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 역시 평균 급식 단가는 3,683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과 비교하면 약 400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급식비 단가를 상향평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별 격차 해소와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양질의 급식 서비스와 더불어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기대효과

현재 불균형적인 급식 단가를 개선해 전반적인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함께 만족도 높은 학교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 급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p><b>지역공약</b> <b>1</b></p> <p>내용</p>	<p>(공약명) 충주-서울 50분 시대</p> <p><b>■현황 및 문제점</b></p> <p>충주는 지리적으로 중부내륙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중심에 있지만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교통의 불편함은 문화, 의료, 일자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져 인구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b>충주-서울 50분 시대, 교통혁신 5대 공약</b> 수도권광역교통망 GTX 노선 충주 편입, 제2경부선 철도망(수서~부산) 구축,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구간 편도 3차로 확장, 과천-충주 민자고속도로 재추진을 공약함. 광역 고속 철도망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충주에서 서울에 50분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중부내륙권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충주를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임.</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b>GTX D노선(인천공항-여주, 원주)노선 충주 편입</b> - 현재 연구용역 추진 중 (2023.7월부터 21개월)인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에 GTX-D노선 여주~충주 구간 반영</p> <p><b>제2경부선 철도망 구축</b> - 현재 계획 중인 수서-광주(2029~30예정)-부발(경강선)-충주(기연결)-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예타통과)-부산을 연결하는 제2경부선 철도망을 구축,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정 반영 추진</p> <p><b>중부내륙철도 복선화</b> - 이천(부발)~문경~김천 구간, 23년 2월 충주시에서 충북도로 기제출된 계획 및 24년 2월 충북도에 서 국토부로 제출된 계획을 통과시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에 반영</p> <p><b>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구간 편도 3차로 확장</b>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JCT~여주JCT 구간(L=25.9km)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23.7~)중으로, 사전타당성 통과 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조속 추진</p> <p><b>과천-충주 민자고속도로 재추진</b> - 경기도 과천시~충주시 신니면(L=86.5km) 구간 민자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KDI의뢰 예정으로, 적격성 조사 통과 및 민간투자사업심의,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p> <p><b>■재원조달방안</b></p> <p>민자, 국비, 도비, 시비</p>
---	--

<b>지역공약</b> <b>2</b>	(공약명) 충주 체류형 관광 활성화
<b>내용</b>	<p> <b>■현황 및 문제점</b>          충주는 탄금호, 충주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내유일의 중원고구려비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문화관광 자원을 도심지의 체류·소비까지 이어내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충분히 만들어오지 못해왔음.       </p>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b>충주도심 관광집중화, 문화관광이 꽃피우고 활력이 넘치는 충주</b>  <b>탄금호 관광벨트:</b> 충주박물관-국가정원-탄금대 시립수목원(신설공약)으로 이어지는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관광벨트 조성  <b>충주호 관광벨트:</b> 계명산 이색전망대-심향산-출렁다리-활옥동굴-중원레저타운과 관광 케이블카 설치로 충주의 자연과 야경의 아름다움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관광벨트 조성  <b>성서동 관광숙박시설 유치:</b> 성서동 상권 규제완화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유치로 충주 체류형 관광 활성화  <b>2,000석 규모의 충주예술의전당 건립:</b> 충주시민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 기반 시설 건립       </p> <p>         단순한 관광을 넘어, 충주에 머무르고 충주에서 소비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 소비증대, 경제적 효과 극대화 기대       </p> <p> <b>■이행절차 및 기간</b>  <b>국립 충주박물관 조속 건립:</b> 충주시 금릉동 600-23번지 일원. 26년 하반기 준공 위해 국비 추가 확보  <b>충주 국가정원 조성:</b>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능암늪지 일원)인 충주지방정원 조성(~25년 계획) 후, 국가정원 승격(지정요건 충족 및 운영 3년 이상) 추진  <b>탄금대 시립수목원 조성:</b> 칠금동 탄금대안길31 일원. 시비 확보해 추진하고 국비 및 특별교부금 국회 반영  <b>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b>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일원. 전망대 및 부대시설 조성으로 충주호 및 충주도심 조망 랜드마크 건립. 산림청 친환경 소재 목조전망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노력, 임기 전반기 내 정부 예산 반영(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및 착공 노력  <b>심향산 정원 조성:</b> 심향산 권역 아트폴리(자연 친화형 휴식공간) 조성 중, 확대 추진. 충주시-수자원공사 '충주댐 가치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2019)'을 기반으로 추진.  <b>충주호 출렁다리 설치:</b> 태양산~목벌유아숲체험장(L=410m), 소요 예산 150억 예상. 수자원공사 협약 사업으로 24년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6년까지 조성 (수자원공사 상생협력비 60억 확보)  <b>중원종합레저타운 조성:</b> 충주시 살미면 문화리 일원. 27.8만평 규모로 숙박시설, 마리나, 치유정원, 관광레저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해 '휴양형 관광거점'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착공. 28년 말 준공 예정(민자 기투자 100억원)  <b>안림동 관광케이블카 유치:</b> 안림동~계명산휴양림~심향산~출렁다리~활옥동굴~중원레저타운을 잇는 케이블카. 부지선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추진, 케이블카 조성 민간투자 유치  <b>성서동 관광숙박시설 유치:</b> 고도제한 완화 및 종상향 필요. 시와 긴밀히 협조해 종상향 도시계획 수립 후 충북도 협의 진행. 대규모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사업제안자 물색  <b>충주예술의전당 건립:</b> 1000석 이상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예술의전당. 부지선정(탄금대), 기본계획 용역 수립 및 타당성 조사(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이상 투입 신규사업) 진행. 국비 및 지방비 확보       </p> <p> <b>■재원조달방안</b>          민자, 국비, 도비, 시비          - 공모사업 선정 (산림청 전망대 공모사업) 추진       </p>



<b>지역공약</b> <b>3</b>	(공약명) 아동·청소년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b>내용</b>	<p> <b>■현황 및 문제점</b> </p> <p>         충주시는 지난해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충북 북부권 도시의 경우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까지의 거리로 인한 접근성 문제가 있음. 의료인프라의 부족은 충주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정주여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p>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p> <b>아동·청소년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b>          소아청소년 야간 응급진료센터 설립, 북부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p> <p> <b>■이행절차 및 기간</b> </p> <p> <b>소아청소년 야간 응급진료센터 설립</b>          - 보건복지부 소아진료 지원사업 (내역사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선정 : 현재 전국 10개소 중 충청북도 지정기관 없음. 법정기준에 맞춘 운영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 평가 지정을 득할 계획. 개소당 2~5억 지원.       </p> <p> <b>충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b>          - 충주의료원(도립) 보건복지부 공모사업(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지정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통해 충청북도 북부권(단양, 제천, 충주)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p> <p> <b>■재원조달방안</b> </p> <p>         국비, 도비, 시비          - 공모사업 선정(국비 매칭) 추진 및 보건복지부 평가 지정(국비 지원) 활동       </p>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이종배)

<p><b>입법공약</b> <b>1</b></p>	<p>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강화</p>
<p>내용</p>	<p><b>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설 등)</b></p> <p>■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li> <li>- 그러나 '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li> <li>-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사용분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li> </ul> <p>※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의 합리적 추계는 불가능</p> <p><b>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b></p> <p>■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부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li> <li>-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li> <li>-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li> <li>-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함.</li> </ul> <p>※비용추계 요구되지 않음</p>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 신설 및 혜택 상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향상에 기여.</li> </ul>

<b>입법공약</b> <b>2</b>	농지 활용·거래 규제 완화
내용	<p><b>‘농지법’ 개정</b></p> <p><b>1) 주말·체험 영농목적 및 치유농업 영위 용도 보유규제 완화</b></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그런데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u>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u></li> <li>- 이로 인하여 2023년 1~8월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li> <li>- 이에 <u>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u></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u>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주말·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u></li> </ul> <p><b>※비용추계 요구되지 않음</b></p> <p><b>2) 농촌 체류형 쉼터(임시거주시설) 허용</b></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li> <li>-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설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타용도 일시사용 또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도시민들의 주거시설 마련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li> <li>- 게다가 일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분류된 농막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li> <li>- 이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함으로써, <u>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나아가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임.</u></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으로, <u>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증가 및 농촌소멸 극복에 기여</u></li> </ul> <p><b>※비용추계 요구되지 않음</b></p>

<b>입법공약</b> <b>3</b>	보훈 급여금 지급 시스템 개선
<b>내용</b>	<p><b>‘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b></p> <p><b>1)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형평성 제고</b></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li> <li>- 그런데 현재 시행령 별표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li> <li>- 이에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u>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u></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을 ‘수급권 소멸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바,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u>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u></li> </ul> <p><b>※비용추계서 별첨 (문서 하단 120p부터 확인 가능)</b></p> <p><b>2) 상이등급간 보훈급여금 형평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에서 7급으로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li> <li>-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 6급3항과 7급 간 상이 정도의 차이가 모호한 데에 반해, 7급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6급3항의 56%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보다 적은 수준임.</li> <li>- 이에 <u>상이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도록 하고, 6급3항과 7급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u></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3항과 7급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u>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u></li> </ul> <p><b>※별도 비용추계서 없음</b></p>

<b>지역공약</b> <b>1</b>	항공물류 허브공항 유치
내용	<p> <b>■ 현황 및 문제점</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 민·군 겸용공항은 8개로, 그 중 6개 공항은 물동량이 있음.</li> <li>- 특히 청주공항의 경우 '23년 물동량이 3,025톤에 달함. 청주공항은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전용활주로 증설이 필요한 시점으로, 화물 기능 분리가 적절.</li> <li>- 한편, 충주 중원 비행장은 1990년대부터 운영을 시작해 규모는 약 1,200만㎡로, 현재 2개의 활주로 모두 군에서 사용하고 있음.</li> </ul> <p> <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 중원비행장에 민간 물류를 담당하도록 공용화를 추진하고 인근에 화물 인프라 구축으로 <u>중부권 항공물류 전담 기대</u></li> </ul> <p> <b>■ 이행절차 및 기간</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군 비행장을 민간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당 군 본부 및 기지, 민간기 사용자 간 민항 전용시설의 설치 등을 협의해야 함.</li> <li>- 이에 당선 즉시 국토부 및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유관 부처·시민단체·충주시·충북도·민간항공사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의원 임기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li> </ul> <p> <b>■ 자원조달방안</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있는 활주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다만 활주로 확장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결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비를 대거 확보한 노하우와 인맥을 활용해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li> </ul>

<b>지역공약</b> <b>2</b>	중부권 물류단지(센터) 조성 및 우량 물류기업 유치
<b>내용</b>	<p> <b>■현황 및 문제점</b>          - 충주는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 중심에 위치함에도 교통이 낙후돼 발전이 정체된 상황이었음. 이에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쓴 바 있음. 이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이러한 위치적 장점과 교통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중부권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우량 물류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p>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 현재 이천에 약 80만㎡의 한국패션유통물류단지가 조성돼, 약 2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          - 충주에 중부권 물류단지를 조성 시, <u>우량 물류기업들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u> 기대.       </p> <p> <b>■이행절차 및 기간</b>          - 충북개발공사와 이미 관련 내용을 논의한 바 있고, 국내 우량 물류기업과도 협의 중.          - 당선 즉시 충북개발공사와 논의를 활발히 하고 우량 물류기업 대표와 면담할 예정으로, 임기 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p> <p> <b>■재원조달방안</b>          - 이천 물류단지의 경우도 국비, 지방비 및 연간 지원 예산 없음. 민자를 유치하고 확장 필요시 충북 개발공사 및 충북도, 충주시와 적극 협의하겠음.       </p>

<b>지역공약</b> <b>3</b>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기 조성 및 내수면 마리나개발 본격 추진
내용	<p> <b>■현황 및 문제점</b>          - 충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승인('18.12/국토부), 민간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원익엘앤디, '21.2), 사업 협약체결('22.4),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2.6) 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          - 이에 환경부 장관 및 국립생태원 관계자에게 촉구해, 충주호 권역 생태자연도 등급을 조정('23.6)함에 따라 사업 본격 추진, 가시화됨       </p>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 힐링·치유 기반의 '친환경적 휴양형 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u>충주호 일원 연계관광 활성화 및 국민관광 수요 충족</u>에 기여          - <u>충주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u> 도모          - <u>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통한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u> 기대          (생산 유발 2조 원, 취업 유발 3,213명 등)       </p> <p> <b>■이행절차 및 기간</b>          ~ '24.7 사업 계획 수립(컨셉, 도입 시설 등)          ~ '24.8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충북도 → 국토부)          '25.9 ~'26.3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26.6 ~ '28.12 착공 및 준공       </p> <p> <b>■재원조달방안</b>          - 총사업비: 2,350억 원(도비 50, 시비 300, 민자 2,000)       </p>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이경용)

<p>입법공약 1</p>	<p>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기업 이전법</p>
<p>내용</p>	<p><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1.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 극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증가, 지방세 증대, 일자리 유치, 지역 활력 등 성과</li> <li>2) 반면 정주 여건의 부족과 유턴현상, 수도권 기업 이전 부족, 앵커 산업 부재, 지역산업과 연계성 부족 등</li> <li>3) 충북의 이전 공공기관은 16개로 전국 하위, 시장형 공공기관은 전무.</li> <li>4) 충북 혁신도시의 입주기업은 87개(2022)로 전국 혁신도시에서 하위..</li> <li>5)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기업 이동은 40.2%(35개) 수준에 불과, 불균형 해소에 한계.</li> <li>6) 인접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인구유입(빨대효과), 광역 내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li> </ol> <p>2. 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1. 10. 19.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제천. 단양 포함 인구감소지역 89개 선정 (행정안전부)</li> <li>2) 2022. 6. 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소멸대응기금: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 재원('22년은 7,500억) 지원</li> <li>3) 한시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 지자체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사업 발굴의 어려움</li> <li>4) 단기적 운영분석으로 가시적 성과, 단기사업 치중 우려</li> <li>5) 인구 증가를 위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 기반 조성은 현 지원 특별법으로 한계.</li> <li>6)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공공기관, 기업 이전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가능.</li> </ol> <p>○ <b>관련 입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기업 이전법 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혁신도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li> <li>2)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명시, 이전 기업의 세제 혜택 등 지원 근거</li> </ol> </li> <li>2.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기업 이전법 제정 무산시 대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 소멸위기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우선 고려</li> <li>2)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소멸위기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대상 근거마련</li> <li>3) 인구감소지역 형 혁신도시 유형의 개발 및 국가 차원의 정주여건 조성 및 지원 근거마련</li> </ol> </li> </ol> <p><b>■ 기대효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발전, 혁신도시 조성 목적과 취지 부합</li> <li>2. 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극복</li> <li>3.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인구증가 효과</li> </ol>



<p>입법공약 2</p>	<p>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법</p>
<p>내용</p>	<p><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1. 한국의 양극화, 불평등 및 지역간 격차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36개 회원국 중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 28위, 상대적 빈곤율 31위, 소득 5분위 배율 29위</li> <li>-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심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위험지역 2023.2)</li> </ul> <p>2.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지능형 생산 기반의 등장</li> <li>- 노동시장 구조변화가 불가피, 이로 인한 고용감소,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 영향 심화</li> </ul> <p>3. 초저출생, 초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0%.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고령인구</li> <li>- 생산인구의 감소, 피부양자 증가로 인한 부담증가,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3.38% 감소</li> </ul> <p>4. 사회보장 정책의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평균 60%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22년 기준 GDP 대비 14.8%).</li> <li>- 고용제를 전제로 하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한계</li> <li>-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li> </ul> <p>→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삶의 보장 대책이 필요</p> <p>5. 대안으로의 기본소득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부: 자연적 자원, 사회적 협력에 의해 발생하는 자원 등, 특정 주체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이익</li> <li>*기본소득: 일정 금액을 구성원 누구에게나 정기적, 무조건, 보편적으로 직접 지급되는 소득</li> <li>-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 지원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li> <li>*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li> </ul> <p>→ 기본소득 형태와 시행방식에 따른 혼선, 현 복지법상의 사회보장제도와 충돌(성남시,서울시 사례)</p> <p>→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제 도입, 실현을 위한 자원확보의 법적근거 필요</p> <p><b>◦ 관련 입법</b></p> <p>1.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소득 개념, 지자체 권한 명시, 지자체 단위의 공유부 개발의 법적근거, 중앙정부의 역할과 협력, 기존 법 및 사회보장제도와와의 보완 등</li> </ul> <p>2. 기본소득법 제정 무산시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소멸지역 대상 농촌기본소득법 제정</li> </ul> <p><b>■ 기대효과</b></p> <p>1.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삶의 보장</p> <p>2.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제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와 혼선 예방 및 역할 명시</p>

<p>입법공약 <b>3</b></p>	<p>기후적응, 탄소중립 사회전환 지원법</p>
<p>내용</p>	<p><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1.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전 세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 섭씨 1.5~2도 제한의 국제적 합의</li> <li>* 탄소중립: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li> </ul> <p>2. EU 탄소국경세, 미국 청정경쟁법 추진 등 탄소무역장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202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관세 부과</li> <li>* EU: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100%, 산업부문 2030년까지 100% 확대 예정</li> <li>- EU의 탄소국경세 부과 시 한국의 수출은 약 3조 6,608억 원 감소 예측.</li> <li>- 미국: 청정경쟁법(수입 제품의 탄소세 부과)</li> </ul> <p>3. 한국의 탄소중립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12.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li> <li>- 2021. 8.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li> <li>- 그럼에도 41개 업종, 227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 10% 수준, 화석에너지 의존 82.6%(2021)</li> <li>- 탄소중립비용은 2050년까지 연간 4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li> </ul> <p>4. 산업전환 및 사회, 경제적 전 분야의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기반 생산, 탄소배출 산업 →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li> <li>- 이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일자리 및 노동의 위기 도래</li> <li>- 2023.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li> <li>→ 선언적 수준, 이해 당사자의 참여보장 부재, 고용안정 대책의 구체성 결여.</li> <li>* <i>산업전환으로 사회양극화의 우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 (2015 ILO)</i></li> </ul> <p>5. 개별법에 의한 기후적응과 탄소중립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기본법: 실질적 대응을 위한 구체성 결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체계연계 부족 등</li> <li>-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환경정책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 유관 법, 정책의 산개, 법률간 정합성 부족</li> <li>- 보건, 식량, 수송, 건설, 방재 등 전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위한 통합대책, 체계의 부재</li> </ul> <p>→ 기후적응과 탄소중립 시대, 산업 및 사회 전 분야의 전환 및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p> <p>• 관련 입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후적응, 탄소중립 시대 사회전환 지원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전환, 고용안정, 보건, 건설, 수송, 재난 등 포괄적인 전 분야의 전환과 지원근거 마련</li> <li>- CCU 등 탄소포집 및 활용기술의 지원 근거 마련</li> </ul> </li> <li>2.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탄소세 등 탄소중립 사회전환에 따른 자원 마련</li> </ol> <p><b>■ 기대효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탄소중립 시대, 산업과 사회 전 분야의 안정적인 전환</li> <li>2. 기후 불평등 해소 및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기반 확보</li> </ol>

<b>지역공약</b> <b>1</b>	<b>자주 자원 2,730억 확보</b>
<b>내용</b>	<p><b>■ 취지 및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댐, 시멘트 산업으로 수몰 및 사회, 경제적 피해 발생</li> <li>- 자주자원 확보로 지자체의 자립성 및 자율성 강화</li> <li>- 인구감소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li> </ul> <p><b>◦ 관련 내용</b></p> <p><b>1) 물이용부담금의 지원 비율 조정(452억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이용부담금 연간 6천억 원 규모, 지원비율은 수도권 49%, 충북 9%</li> <li>→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li> <li>→ 물이용부담금의 조정으로 충북지원 20% 상향, 충북의 40%를 수몰 지역에 배분</li> </ul> <p><b>2) 충주댐 초과이익 지역환수(530억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과 용수 판매 수익의 초과 이익 연간 1,670억 원 규모</li> <li>-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초과 이익 환수</li> <li>* 국회예산정책처: 초과수익의 지역환원 방안의 필요 지적(2018)</li> </ul> <p><b>3)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와 폐기물 반입세 신설(548억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생산시설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li> <li>- 폐기물 반입, 소각 등의 수익에 대한 폐기물 반입세 과세</li> </ul> <p><b>4) 이익공유제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확대(1,200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휴지 활용한 1GW급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치</li> <li>- 주민이익공유제 기반의 주민 배당제 실현</li> </ul> <p><b>■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적 자원 확보로 지역 주도형 발전계획과 실행력 확보.</li> <li>- 댐, 시멘트 산업의 부정적 영향 극복, 공존과 동반성장 계기</li> <li>-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li> </ul>

<b>지역공약</b> <b>2</b>	<b>지역 미래산업 전환 및 풀뿌리 경제 활성화</b>
<b>내용</b>	<p><b>■ 취지 및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도 내 1인당 GRDP 최하위. 소득분배 격차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성 확보</li> <li>- 산업변화에 따른 기존 한방·바이오 산업에서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li> <li>-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3중고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원</li> </ul> <p><b>◦ 관련 내용</b></p> <p><b>1) 생물 소재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 및 기반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9. 21.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정부부처 합동)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및 5대 유망산업 집중 육성 추진'  5대 산업: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li> <li>→ 한방·바이오산업에서 생물소재 융합클러스트로 전환</li> <li>→ 바이오 대체식품, 바이오 천연물 의약품 산업기반 조성</li> </ul> <p><b>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지원 중소기업의 3대 미래전환 지원(디지털화, 탄소중립, ESG 지원)</li> <li>*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의 지원기준 조정, 지원대책 강화</li> <li>* 탄소중립, ESG 요구에 따른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li> <li>-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li> <li>→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타 법정 출연금 제도의 수준으로 상향</li> <li>→ 횡제세 과세 등 이익공유제 기반의 재원 마련</li> <li>- 2023년 5대 시중은행(KB·농협·신한·우리·하나) 이자이익 총 41조 3878억원  (2022년 대비 1조 9266억원 증가) / 2024.2.18. 금융감독원</li> </ul> <p><b>3)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금리 대환대출 제도, 정책자금의 확대 등 자금 부담 완화.</li> <li>-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확대, 온누리 상품권의 확대 추진</li> <li>→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국가지원 의무명시</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골목형 상가 지정 요건 완화</li> </ul> <p><b>■ 기대효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 싹틔줄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의 보호 강화</li> <li>2) 풀뿌리 자본의 형성, 축적으로 지역의 순환경제 촉진</li> </ol>

**지역공약**  
**3**

**경제 위기에 따른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 취지 및 목표**

- 경제위기,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이 시급
- 지역사회에서의 빈곤저지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

**• 관련 내용**

**1) 생애 관점의 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개선으로 소득보장 확대
- 장애아동 특수교육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강화
- 탈시설화, 자기예산제 추진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 사회복지사와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2) 아동,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사회진입 전, 자립펀드 조성 추진
- 피해 아동 중심의 아동학대 보호 체계 구축
- 디지털 범죄,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처벌 강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개입 및 지원제도 마련
- 일, 육아 양립을 위해 부모 지원(자동 육아휴직 제도, 불안정 일자리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3) 청년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 인구소멸위기 지역 대상의 청년수당제 도입
- 청년 창업기반 조성, 저신용 무담보 청년 대출제도 도입
- 청년 취업 지원 및 주거대책 정책 추진

**4)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조성**

-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인 간병비 급여화
- 인구소멸지역 대상의 (농촌지역)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 경로당 완전 무상급식 추진, 경로식당의 보조금 지급기준 현실화
- 어르신 공공일자리 예산 확대, 지역 중심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노인복지 전달체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교육 지원확대.

**5) 안정적인 농업 및 농민지원**

-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제, 수급 안정 작물 직불제 추진
- 필수 농자재 지원법 제정
- 기후재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 농업, 농촌 인력지원 제도 개편 시행

**■ 기대효과**

- 1)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정적 삶의 기회 및 권리보장
-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보편 지향의 복지서비스 제공 계기

내용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엄태영)

<p>입법공약 1</p>	<p>(공약명)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p>
<p>내용</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1. 입법취지</p> <p>①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과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향후 국가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음.</p> <p>※ 청년고용률(15세~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 현황</p> <p>(‘23.05.) 47.6% (‘23.06.) 47% (‘23.07.) 47% (‘23.08.) 47% (‘23.09.) 46.5%</p> <p>(‘23.10.) 46.4% (‘23.11.) 46.3% (‘23.12.) 46% (‘24.01.) 46.3% (‘24.02.) 46%</p> <p>② 지난 8월 기업 조사 결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기업들이 예상한 대졸 신규채용 예상 경쟁률은 81대1에 달했음.</p> <p>⇒ 대학생 10명 중 6명은 휴학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취업준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49%에 달했음.</p> <p>③ 청년 취업난의 지속화는 당사자인 청년세대들에게도 고통이지만, 국가의 미래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임.</p> <p>⇒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말 기준 0.65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난의 지속화까지 더해진다면 성장동력 약화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p> <p>④ 일자리 창출과 고용·노동 개혁 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수립·종합·조정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p> <p>2. 정책목표</p> <p>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고용·주거·결혼 등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과 지원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단순 고용문제 해결만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결혼·고용·창업·주거·복지·금융·문화·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정책 종합적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정책간담회 통한 의견 수렴 및 정부협의, 국회 법제처 검토, 전문가 협의 등 거쳐 합리적인 내용 준비.</p> <p><b>■기대효과</b></p> <p>청년세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를 신설함으로써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청년문제 해결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p>

<p>입법공약 2</p>	<p>(공약명)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p>
<p>내용</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1. 입법취지</p> <p>① 노인과 관련된 대표적 법령인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제정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을 거쳤지만,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전면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p> <p>② 현행 법령은 노인을 보호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잔여적 복지이념에 기반하여 주로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정책의 근거 법률로만 기능하여 왔기 때문에 핵가족화, 저출생 등 현대 사회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음.</p> <p>2. 정책목표</p> <p>① 노인을 소득보장과 돌봄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권리로 규정하고 노인을 보호대상에서 참여주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필요함.</p> <p>②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현재 기능을 반영하고 노인복지관 인력 현실화 및 사업규모와 회원수 등에 따른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함.</p> <p>⇒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노인복지관의 필수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원의 현실화 등</p> <p><b>■기대효과</b></p> <p>노인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기본법령 마련을 통해 노인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주체자로 인정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향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1. 입법취지

- ① 최근 지역소멸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질적 측면에서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② 현재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법제도 및 조직 등이 분산되어 있어 현 정책체계는 교통서비스 증진 정책을 추진해나가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교통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③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방향 제시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하는 제정법 필요.

2. 정책목표

- ① 「교통정책기본법안」 발의.
- ② 21대 임기기간인 2023년12월27일 「교통정책기본법안」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큼.  
⇒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전이고, 국토교통부·국회법제처와 논의하며 내용 수정 필요한 부분 협의해 수정하고 있음.
- ③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지 못할시 22대 국회 개원 후 협의 수정한 내용으로 「교통정책기본법안」 대표발의.

내용

■기대효과

우리나라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토록 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함.

이외에도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의 심의를 위한 관계부처,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제도 및 정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b>지역공약</b> <b>1</b>	<b>(공약명) 제천·단양~수서(강남) 新중앙선 KTX 연결 조속 추진</b>
<b>내용</b>	<p><b>■현황 및 문제점</b></p> <p>①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 중임. 수서~경기광주 연결시 경기광주~부발~서원주~제천~단양~안동을 지나 부산 부전까지 연결되는 신중앙선 완성돼 전국 일일교통 생활권 시대 열릴 수 있음.</p> <p>②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는 전국 단위 고속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수서~경기광주 노선의 적기 개통이 필수적임.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진행방향 논의를 위해 지난 2022년12월7일에 'KTX 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등 함께 토론하고 논의했음.</p> <p>③ 현재 계획은 2025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30년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①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 연결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정상 추진을 위해 차질없는 예산 확보와 철도 품질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p> <p>②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동부, 충청 및 강원지역에 고속화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li> <li>- 중앙선, 강릉선 등 서울 강북(서울, 청량리) 중심의 철도서비스를 서울 강남지역(수서)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철도이용 서비스 제고(서울역, 청량리역 뿐만 아닌 강남 수서로 직행 가능)</li> <li>- 중부·남부내륙선과 연계하여 경부 축으로 집중되어있는 철도수송체계의 분산과 함께 한반도 내륙지역 간선 철도망 완성</li> <li>- 경부 축으로 집중된 경제, 인구, 산업 등 국토발전 축을 한반도 내륙 축으로 분산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효과</li> </ul>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①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 연결사업은 2024년2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임. 실시설계 완료 예정시기는 2025년2월 예정임.</p> <p>② 실시설계 완료 후 2025년 내 공사 착수하여 2030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p> <p><b>■자원조달방안</b></p> <p>①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조1,103억원 투입 예정임. 대한민국 전국 일일교통 생활권 형성과 접근성 향상, 교통편의성 향상,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인 만큼 사업지연·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투입되는 국비 예산의 정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p>

<p>지역공약 2</p> <p>내용</p>	<p>(공약명) 제천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p> <p>■현황 및 문제점</p> <p>① 현재 정부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주관부처 : 법무부)</p> <p>※ (23.12.27.) 법무부는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통해 이민청 신설 확정했음.</p> <p>② 정부의 이민청 신설 추진 확정 이후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음.(24년2월 기준) ⇒ (수도권) 경기 안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김포시, 인천광역시 등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p> <p>③ 지자체별로 법무부에 유치제안서 등 전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민청 입지와 관련해 따로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한적은 없고,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임.</p> <p>④ 충북도 이민청 유치 적극 추진 공식 발표(24.3.11.)와 동시에 유치 장소는 자체 용역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p> <p>■정책목표 및 기대효과</p> <p>① 제천시에 이민자들 국내 정착 지원과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이민청과 연계한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p> <p>②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시 기관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제천 인구 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 세수 증가 효과 등 기대할 수 있음.</p> <p>■이행절차 및 기간</p> <p>① 이민청 충북도 유치 확정시, 충북 이민청 설립과 연계해 충북도 및 법무부 등에 공식적으로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 요청. ⇒ 제천시 내 설립부지 확보 위한 용역 진행 및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제천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논리 근거로 법무부와 충북도에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 등 적극 주장. ⇒ 임태영 의원, 고려인 동포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 내용(고려인 동포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취득 지원, 한국어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 제공 등)을 담은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고려인 유치 지속 추진하고 있음.</p> <p>② 이민청 충북도 유치 실패 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인구소멸위기 극복 △교통요충지로서의 접근성 △제천시 성공적인 고려인 및 재외동포 유치 강점 △제천경찰서·제천교육청·제천상공회의소·세명대 등 기관·단체 등과의 이주·정착 지원 업무협약 추진 등 당위성 주장하며 설립 적극 추진.</p> <p>■재원조달방안</p> <p>① 이민청 설립 추진이 확정된 후,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 진행 예정임.(용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국비 확보 예정)</p> <p>② 부지확보와 타당성, 경제성 등 평가를 위한 용역 진행 후, 결과 바탕으로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 위한 국비 확보 예정</p>
-----------------------------	---

<p>지역공약 3</p>	<p>(공약명) 단양 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p>
<p>내용</p>	<p><b>■현황 및 문제점</b></p> <p>① 단양군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내다볼 정도로 '대한민국 관광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주차난은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요소임. 특히 단양구경시장의 경우 단양군의 유일한 전통시장이자 대표적인 명소라 구경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은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해 주민, 상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큰 상황임.</p> <p>② 단양읍은 공원, 하천부지 외에는 유희부지가 없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고 단양 읍내를 관통하는 주간선도로는 국도59호선으로 도로법 저축을 받아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p> <p>③ 강변 하상주차장 조성도 총주담 수위조절 협의가 쉽지 않아 활용도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① 단양구경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 단양군은 단양읍 주차타워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 계획수립 등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왔음.</p> <p>② 정부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 예정(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관). ⇒ 단양군 2024년 2월7일 공모사업 신청해 3월 충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까지 마쳤음.</p> <p>③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단양구경시장이 선정되도록 필요성과 당위성 정부에 적극 어필하고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 협의해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p> <p>④ 주차타워가 조성될 경우, 고질적인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주변 상점가의 활성화 및 주변 교통혼잡 해소로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를 가져와 주민들과 상인,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① 단양군에서 지난 2월7일 충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했음.</p> <p>② 3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까지 마친 상황임.</p> <p>③ 올해 5~6월 중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2025년부터 기본설계 거쳐 2027년 준공 예정임.</p> <p><b>■재원조달방안</b></p> <p>① 예상 총사업비는 약 160억원으로 국비 60%, 지방비 40%(도비10%, 군비30%)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 협의해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p>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이근규)

<b>입법공약</b> <b>1</b>	(공약명) 국가보훈사업 및 보훈처 사업범위 관련법
내용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국가보훈처가 장관급 정부기관으로 격상되어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다만 높아진 위상에 버금가는 독립운동 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작업을 하고자 한다.</p> <p>특히 좌우 이념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항일 의병운동과 광복군 활동에 대한 보훈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p> <p>이런 관점에서 국가보훈업무 전반을 재정비하고 관련 법에 대한 제, 개정 작업을 펼쳐가고자 한다.</p> <p><b>■기대효과</b></p> <p>우국지사들의 민족운동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를 통해 분단상황으로 훼손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민족애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함</p> <p>특히 진영논리와 이념갈등으로 소외되어온 의병운동에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대한민국 역사의 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족사의 올바른 궤적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p> <p>아울러 보훈 지원대상에서 홀대를 받아온 의병후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의병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함</p> <p><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p>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젊음을 불사른 월남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전투수당을 점검하여 반환하는 작업을 위해 월남참전유공자 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실제로 월남전에 파병된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 매월 30 \$ 이상의 전투수당이 지급되었는 바, 이를 일부만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정설로 평가되고 있음.

당시 어려운 경제형편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 등 굵직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전투수당이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음.

특히 오늘의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통해 굳건한 성장과정을 거쳐올 수 있었던 점에서, 월남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나라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 될 것임. .

내용

입법과정에서 전투수당지급에 대한 입법과정이 마무리 되면, 전투수당을 지급하기 이전에 월 50만원 정도의 선지급 후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기대효과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국충정의 애국적 활동에 대해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끝까지 존경하고 보훈을 잊지 않는 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게 됨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의과대학의 독점적 운영을 개선하여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전문의료인 양성과 지방의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대학교에 의과대학(치과대학) 설립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특히 지방도시에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설립이 허용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임.  
다양한 의료혜택과 공공의료 효과를 증대시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의료복지시스템을 확장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임.

■기대효과

내용

의과대학 혹은 치과대학 설립이 허용되면, 지방대학에 유입되는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소멸도시 위험인자가 사라지며, 지역사회 의료수준이 높아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임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b>지역공약</b> <b>1</b>	(공약명) 대기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
내용	<p> <b>■현황 및 문제점</b>          지방도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추락을 꼽게 된다.          특히 인구 감소는 지방도시에 치명적인 도시문제를 낳게 되고, 도시붕괴 우려까지 생김으로써 도시발전에는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소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대기업을 유치하여 협력업체의 중심지역으로 연계함으로써 자립경제기반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p>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대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젊은 도시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국내 10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혹은 맞춤형 공장부지 형성을 적극 지원함.       </p> <p> <b>■이행절차 및 기간</b>          지역민을 중심으로 대기업추진시민협의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공감대를 중심으로 대기업 유치시에 많은 지원방안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음          국회의원 2년차에 시작을 하고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함       </p> <p> <b>■재원조달방안</b>          사업추진 시민조직의 제경비는 철저하게 자발적 모금에 의하여야 한다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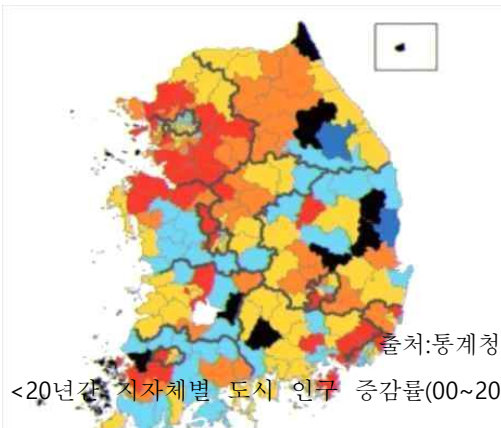
<b>지역공약</b> <b>2</b>	(공약명) 닥터헬기 도입 및 상주
내용	<p> <b>■현황 및 문제점</b>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닥터헬기가 충북지역에는 없는 실정임.          특히 산악지대가 많고 응급의료체계가 필요한 충북 북부권에는 닥터헬기의 효용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p>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응급의료체계를 갖춤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특히 심뇌혈관계를 응급상황 발생시에 골든아워 내에 거점응급의료기관인 원주까지 도착하는 것이야말로 후유장애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함          현재 응급의료시스템의 최고인 닥터헬기를 이용해 큰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약 70%의 소생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됨       </p> <p> <b>■이행절차 및 기간</b>          정부의 닥터헬기 운영정책에 충북을 포함시키는 설득작업을 함          충북에 1대의 닥터헬기가 배치되면 이를 산악지대가 많고 응급의료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북부권에 배치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응급의료체계의 선지화를 실현함          이는 국회의원 임기 초반에 즉시 추진하는 것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p> <p> <b>■재원조달방안</b>          닥터헬기의 운영예산은 연간 약 10억원 ~15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예산은 국비 70%, 도비 30%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판단함,       </p>



<b>지역공약</b> <b>3</b>	(공약명) 단양 지하주차광장 건설
<b>내용</b>	<p><b>■현황 및 문제점</b></p> <p>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이루어진 신단양지역은 당시의 도시계획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 도로계획과 각종 인프라에 허점과 한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임.</p> <p>특히 군청소재지인 단양읍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함</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단양 지하주차광장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li> <li>2.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큰 도움이 되며,</li> <li>3. 유사시 재난대피시설로 활용됨으로써 안전도시로 평가받는 제일의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함</li> </ol>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이 사업은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체 거주인의 대대적인 동의와 환영에 의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임</p> <p>단양군민 5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사 추진과정에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과정에서부터 사업 추진의 추동력을 확보되도록 함</p> <p>사업추진 기간은 약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p> <p><b>■재원조달방안</b></p> <p>단양 지하주차광장 건설에는 약 3천 7백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방책을 가지고 있음.</p> <p>참고로 핵방폐장시설을 유치한 경주시의 경우 이미 4조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함</p>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권석창)

<b>입법공약</b> <b>1</b>	(공약명) 지방 거점 중소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발의
<b>내용</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b>▶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 극복(주말)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실질 정주 인구 증가)을 위한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문 대학 등 상급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 유도</li> <li>- 사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li> </ul> </li> <li>○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지원 마련</li> </ul> <p><b>■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문 대학 등 상급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 유도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인구 증가 및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과 수도권 간 교육 서비스 품질 분균형 완화 및 자녀 교육이 이유로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 근로자 가족의 이전 유도를 통한 인구 증대 효과 기대됨</li> <li>○ 대학 병원의 동반 이전을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li> <li>○ 지역의 유능한 인재 매칭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사기업의 적극적 지방 이전 유도를 통해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착 인구 확대 효과 기대</li> <li>○ 지방 이전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무상 제공 및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한 체계적 교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 수익 창출 및 정착을 통한 지역 활성화</li> </ul> </div> <div style="width: 50%;"> <p><b>▶ 지역 불균형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인구의 90.8%가 6.7%면적의 도시(준도시 포함)에 거주, 국토 면적 93.3% 비도시에 총 인구의 9.2%만 거주</li> <li>○ 상위 1% 근로소득자 77% 수도권 소재 직장 근무</li> </ul> <p><b>▶ 지역 불균형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인구 과밀에 따른 혼잡도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및 사회적 비용 야기</li> <li>○ 불균형 심화로 인한 지역 갈등 확대</li> <li>○ 지역 중소도시소멸 위기</li> </ul>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통계청 &lt;20년간 지자체별 도시 인구 증감률(00~20년)&gt;</p> </div>

(공약명)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복지 증진 특별법(가칭) 발의

내용

###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 입법 취지

- 지역의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의존률이 높으나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비효율적 노선 체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음  
※ 일평균 대중교통 인구 비율: 서울 34.32%, 강남 38.5%, 제천 3.4%
-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 교통 정체, 주차난 등 중심 변화가의 도로 혼잡도가 높고, 이로 인해 특 히 출퇴근 시간대의 이동 편의성이 매우 저하됨
- 자가용 이용 증대로 인한 탄소 배출량 증가로 대기 환경 오염 문제 발생  
※ 1km 이동 시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 승용차 270g, 버스 27.7g, 지하철 1.53g
-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 거주 노령인구 및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 심화 등 사회적 불평등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발생
- 버사회사는 준공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음

#### ▶ 정책 목표

-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복지 증진 법률안 발의
  -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화 시행 이 후 단계적으로 전 연령층으로 확대
  -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도시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국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 추진
  - 도시 철도 등과의 환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 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

### ■ 기대효과

- 시내버스 이용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자가용 이용이 감소하며 교통혼잡도가 완화됨.  
※ 화성시의 경우 무상교통 실험 결과 버스 이용객이 시행 전 연간 148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고 승용차 운행은 2년간 430만대 감소함
- 자가용 이용이 감소하며 배기가스 감소로 인한 온실효과 감축  
※ 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가능한 '9유로 티켓' 발행 이후 탄소 배출량 180만t 감축
- 인구 이동 및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청송 무료 버스 운행 후 식당 매출 약 30% 증대, 상반기동안 버사회사에 1억6,000만 원 지원, 지역경제 효과 15억~20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
-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하며 버스 배차 간격 및 노선의 효율적 개편이 가능해짐으로써 버사회사의 경영 개선 및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현저히 증대됨
- 도로 이용 차량이 감소하며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감축 효과 기대
- 노령 인구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한 복지 비용 감소

<b>입법공약</b> <b>3</b>	(공약명)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b>내용</b>	<p> <b>■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 </p> <p> <b>▶ 입법 취지</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는 2천억원~8천억원 규모로, 제천단양 지역은 전국 시멘트 생산의 대략 40%, 인근 영월까지 고려하면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에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2/3정도가 생산되고 있어 피해의 집적도는 매우 높음</li> <li>○ 폐플라스틱 등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대략 20%가 제천, 단양, 영월에서 발생함</li> <li>○ 쓰레기는 발생 지역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멘트사에서 연간 처리하는 수백만톤</li> </ul> <p> 의 쓰레기들 중 지역발생 쓰레기는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되며 그에 따른 환경 및 생존권과 주거안정권, 재산상의 피해 발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책을 미비</li> <li>○ 타 지역의 경우 세금으로 주민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나, 제천 지역의 경우 세금 대신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어 주민들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li> <li>○ 현재의 운용 기금은 시멘트사와 국회의원들 간의 협약에 의해 징수되므로 세금에 비해 불안정</li> </ul> <p> 할 수 밖에 없고 기존 시멘트사가 출연하던 사회 공헌금 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을 대표성이 결여된 민간 협의체가 맡고 있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불화 유발 가능성 내재됨 </p> <p> <b>▶ 정책 목표</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 및 복지 증진에 기여</li> </ul> <p> <b>■ 기대효과</b>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에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시했던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국에서 약 500억원의 세금징수가 가능하고 제천단양 지역에서 대략 200억원의 세금 징수가 가능</li> <li>※ 화력발전과 비교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세가 무산되면서 3배가 증액되어 연간 약 4,000억원 징수 가능 (화력발전과 시멘트생산은 비슷한 양의 미세먼지 발생)</li> <li>○ 기금 형태 대신 세금으로 징수하여 운용한다면 더 많은 자원 확보가 가능하고 재원의 투명성이</li> <li>담보됨</li> <li>※세금 500억 Vs. 기금 250억 미만</li> <li>○ 시멘트 생산에 따른 피해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이중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공정한</li> <li>보상 가능</li> <li>○ 제천, 단양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 들로써, 매년 세금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민 건강에 재투자하여 인구 소멸과 지역간 격차에 대응 가능</li> </ul>

지역공약  
1

(공약명)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제천은 철도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인근 도시 대비 수송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명성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음  
※ 2022년 기준 수송객 현황: 제천역 156만명, 충주역 75만명, 원주역 124만명)
-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저하되며 내방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 수도권 도시들과의 직접 연결 노선이 적거나 없어 서울을 경유하거나 수차례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그에 따른 이동 효율성 감소 및 수도권 접근성 하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선을 제천까지

연장 추진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시



- ▶ 제천역에 차량기지 건설
- ▶ 65세 이상 무료 및 일반인 3,000원대의 저렴한 광역철도 요금 책정



지역 내방객 확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

현 청량리 ↔ 온양온천역 3,500원  
VS  
청량리 ↔ 제천역 KTX 15,400원

제천 ↔ 분당 · 제천 ↔ 수서 · 제천 ↔ 인천행

열차 투입

2025년 중앙선  
고속화 완공 시



- ▶ 제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소요



2028년 이후

서원주 ↔ 여주 · 경기도 광주 ↔ 수서 · 판교 ↔ 월곶행  
노선 확장 시  
제천 ↔ 분당 · 제천 ↔ 수서 · 제천 ↔ 인천 간  
선로 연결 가능

■ 이행절차 및 기간

2024~2028년 수도권 전철 연장 계획 방침 수립

2028년 서원주~부발 연결선 준공에 맞추어 제천~판교 열차 투입 요구

■ 자원조달방안

현행 추진 사업으로 추가 자원 조달은 필요하지 않으며 열차 추가 투입 시 지자체 자원 분담  
방안에 대한 협의 필요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청풍호가 제천시 남북을 가로질러 둘레길을 따라 단양군에서 제천시로 접근하는 도로망은 국도 5호선이 유일하며(자동차로 45분 정도 소요), 평면선형(R>200이하)이 불리하여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 증가(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51~60세이상 사고건수 29.9% 최대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참조
- 청풍호가 제천시 남북을 가로질러 둘레길을 따라 남부 4개면에 접근하는 도로망은 국지도 82호선이 유일하며(제천 남부 4개 면에서 제천시청 이동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 평면 및 중 단선형이 불리하여 교통지정체 문제해결 불가
- 남한강 및 충주호 주변 도로망 미비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 불편초래  
※ 현재 황석리, 부산리에 낚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매우 취약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정책목표

- 국도5호선(단양~제천)도로건설 사업 추진 -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 및 입체 교차로 추가 설치
- 봉양~덕산 도로건설사업 추진 - 제천 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38번 국도와 남부를 동서로 관통 하는 36번 국도를 연결하는 missing link 사업 추진

▶ 기대효과

<국도5호선(단양~제천)도로건설 사업 추진>

- 사업노선 개설 시 단양에서 제천시청 방향 교통 분산을 통한 지정체해소
- 사업노선을 통한 도로 연장축소(L=14.8km→12.1km, 감 2.7km)로 지역 접근성 확대
- 도로망 확충에 따른 국도 5호선 구간별 신설(기하구조 개선)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사고위험 해소

<봉양~덕산 도로건설사업 추진>

- 사업노선 개설시 지방도532호선과 평면접속을 통해 봉양에서 제천시청방향 교통분산을 통한 지정 체해소 및 봉양~금성면 접근성 개선
- 사업노선 및 국지도82호선을 통한 제천시내에서 청풍호 북쪽측 지역 접근성 확대
- 도로망 확충에 따른 국지도82호선 지정체 해소 및 청풍호수 관광객 증대 기여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4~2027년
  - 38번 국도 선형 개량사업 착공
- 2024~2028년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36번, 38번 국도 연결 사업 반영
  - 59번 국도 선형개량 사업 계획 반영

■ 재원조달방안

-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예산 확보 예정

사업명	국도5호선(단양~제천)도로건설 사업	봉양~덕산 도로건설사업
공사비	- 4,464억원	- 4,861억원
보상비	- 603억원	- 262억원
추정사업비	- 5,574억원(예비비10% 포함)	- 5,634억원(예비비10% 포함)

<b>지역공약</b> <b>3</b>	(공약명) 제천 단양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황 및 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관광자원의 경우 단순 경관 관람형의 비중이 높아 지역 내 체류시간이 짧아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li> <li>○ 기존 관광지가 청풍권 중심 구조로 제한되어 있어 관광객의 도심 유입을 위한 유인이 미미하여 단순 경유형 관광지로서의 성향이 강함</li> <li>○ 지역 내 유명 관광지 인근 도로 및 주차 환경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짐</li> <li>○ 충주까지 연결되는 서울 수도권역의 자전거도로가 제천까지 연결되지 않아 수도권 자건거 도로 이용객의 유입이 제한적임</li> </ul> </li> <li>■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책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림지 관광단지 확대 조성 및 단양 수변무대 리모델링 사업 추진</li> <li>○ 충주 제천간 강변 자전거도로 조성</li> <li>○ 의림지 제2 접근로 건설 및 단양 구경시장 대형 주차장 확보</li> </ul> </li> <li>▶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림지 및 단양군 내 랜드마크 건설 및 복합 문화 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의 도심지역 유입을 유인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li> <li>○ 관광지 진입로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의 유입 및 재방문 유도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li> <li>○ 충주 제천간 강변 인접 자전거도로 신설을 통해 서울 수도권 내방객 증가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증진</li> </ul> </li> </ul> </li> <li>■ <b>이행절차 및 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림지 관광단지 확대 조성 사업 및 제2 접근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2025 문체부 공모사업 공모</li> <li>- 2026~2027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li> <li>- 2028 착공</li> </ul> </li> <li>○ 충주 제천간 강변 자전거도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2026: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li> <li>- 2027 착공</li> </ul> </li> <li>○ 단양 구경시장 대형 주차장 확보 및 수변무대 리모델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2026: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li> <li>- 2027 착공</li> </ul> </li> </ul> </li> <li>■ <b>재원조달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림지 관광단지 확대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2025: 문체부 공모사업 공모</li> <li>※ 문체부 "대한민국문화도시" 전국 권역별로 13개 지역 지원예정(25~27), 보조율 50%로 기획</li> </ul> </li> <li>○ 충주~제천 간 강변 자전거도로 조성, 단양 구경시장 대형 주차장 확보 및 수변무대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포괄보조금 사업 유치</li> </ul> </li> </ul> </li> </ul>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이재한)

<p>입법공약 1</p>	<p>(공약명)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p>
<p>내용</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가격 변동 축소를 위한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및 지역의 농업 경쟁력 유지 등을 목표로 제정된 「양곡관리법」에서 쌀 수매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 의결을 통해 통과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내용)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정부 수매</li> </ul> </li> <li>○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되었으며, 민주당에서 개정안 재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의 개정안 재추진 내용에서 국가의 수매 의무를 일부 약화시키는 방향 포함됨</li> </ul> </li> <li>○ 지역 농민들의 현실은 양곡관리법 강화 등이 매우 시급히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수매 의무를 강화하고 수매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함</li> </ul> </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가격 변동 축소를 위한 농가의 소득 안정화</li> <li>○ 지역의 농업 경쟁력 유지 및 지역 경제 침체 예방</li> <li>○ 거시적으로는 식량 안보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li> </ul>



<b>입법공약</b> <b>2</b>	(공약명)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국회법」 개정
<b>내용</b>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동남4군은 지역 현역의원의 사익추구, 이해충돌, 부실한 의정활동 등으로 정치 개혁 및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매우 큼</li> <li>○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회의원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개정</li> <li>- 국회의원의 사익추구, 이해충돌이 밝혀질 시 처벌을 강화</li> </ul> </li> <li>○ 또한,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개정</li> </ul> </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 사익추구 행위, 이해충돌행위 방지</li> <li>○ 일하는 국회 실현을 통한 유권자 정치 체감도 향상</li> </ul>

<b>입법공약</b> <b>3</b>	(공약명)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b>내용</b>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넘어선 지역소멸 위기 지역은 대부분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주민 생활 인프라도 취약</li> <li>○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차등적 지원 확대 및 생활 인프라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li> <li>- 여기에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하여 지역 내 불균형도 개선</li> <li>- 또한, 기초 지자체 매칭 사업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매칭 비율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li> </ul> </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화지원 및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및 인구 회복 계기 마련 가능</li> </ul>

<p>지역공약 <b>1</b></p> <p>내용</p>	<p>(공약명) 지역경제·일자리 1-3-5 프로젝트</p> <p>■<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4군의 핵심 현안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0년간 동남4군 인구는 1.6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2만 명 감소</li> </ul> </li> <li>○ 지역소멸 위기 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 관건</li> <li>○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함</li> </ul>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4군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 100만 평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천군 청산면 : 40만평(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 영동군 황간면 : 30만평(일반산단), 광물소재산업, 괴산군 칠성면 : 30만평(일반산단), 유기농식품, : 보은군 내북·산외면, 20만평(일반산단), 정원산업</li> </ul> </li> <li>○ 유망 중소기업 300개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5,000개 창출</li> <li>○ 대청호 수자원을 공업용수로 활용해 물사용료를 경감하고, 공공인력센터를 통한 원활한 일력 공급체계 마련</li> <li>○ (인구) 양질의 일자리 5,000개 창출로 인해 지역 생활인구 2만 명 확대 예상</li> <li>○ (생산) 지역총생산 2조원 증가 및 1인당 총생산액 대폭 증대</li> <li>○ (재정) 지방세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 향상 등</li> </ul> <p>■<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입지 분석 및 최종 입지 선정('25년 말)</li> <li>○ 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 완료('26년 말)</li> <li>○ 산업단지 사업 착수 및 분양 개시('27년 중)</li> <li>○ 산업단지 건설 완료('29년 중)</li> <li>○ 산업단지 입주 시작('30년 초)</li> </ul> <p>■<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예산 : 12억 원(3억원/군)</li> <li>○ 개발 실행계획 및 건설 예산 : 민자</li> </ul>
------------------------------------	--

<p>지역공약 2</p> <p>내용</p>	<p>(공약명) 농어임업인 기본소득</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4군의 인구의 1/4, 약 4만 명이 농업, 임업 등에 종사</li> <li>○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농가 또는 농민 소득 개선이 최우선적</li> <li>○ 또한, 고부가 작물로의 전환 등을 위한 농가의 시간적·재정적 기회 제공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 촉진 필요</li> </ul> <p>■정책목표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소득 안정화, 고부가 작물로의 전환 등을 위한 농가의 시간적·재정적 기회 제공 등 목표</li> <li>○ 동남4군 4개 군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 대상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별 기본소득 대상 : 보은군 8천 명, 옥천군 8천 명, 영동군 1만 2천 명, 괴산군 1만 3천 명</li> </ul> </li> </ul> <p>■이행절차 및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4군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수립('24년 말)</li> <li>○ 각 군별 예산 확보 및 시범사업 착수('25년)</li> <li>○ “농어축임업인 생활안정법” 제정 추진('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 등 생활안정 및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률</li> </ul> </li> </ul> <p>■자원조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 예산) 동남 4군 전체 400억 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보은군 80억 원, 옥천군 80억 원, 영동군 120억 원, 괴산군 130억 원</li> </ul> </li> <li>○ 각 군 지방재정으로 기본소득 지급</li> <li>○ “농어축임업인 생활안정법” 시행 이후에는 투입예산의 1/2를 중앙정부에서 보조</li> </ul>
-----------------------------	--

<b>지역공약</b> <b>3</b>	<b>(공약명) 지역화폐 발급 확대</b>
<b>내용</b>	<p><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을 살려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지역화폐'임</li> <li>○ 코로나19, 고금리 등 무너진 지역 소상공업에 희망을 싣틸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은 반드시 지속·확대돼야 함</li> </ul>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화폐 발행액 매년 20%씩 발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군 전체)(‘24년 총 발행 예정액) 1,020억 원 → (‘26년 목표액) 1,470억 원 → (‘28년 목표액) 2,115억 원</li> <li>- 지역화폐 발행액 보조금 군비 : (‘24년 예산액) 84억 원 → (‘28년 목표액) 210억 원</li> </ul> </li> <li>○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 생계 보장 및 소득 증대</li> </ul> <p><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별 지역화폐 확대 계획 수립(‘24년 말)</li> <li>○ 군별 지역화폐 지원예산 반영 및 지원 확대 시작(‘25년 초)</li> </ul> <p><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화폐 보조금 예산 총당 : 국비 40%, 도비 10%, 시·군비 50%</li> <li>○ 각 군별 지원예산 확보(군비 일반회계 반영)</li> </ul>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박덕흠)

입법공약 1	농어민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年120만원)
내용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 위주로 도시가 형성되고 확장·발전되며 모든 관련 산업이 집중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로 도시와 농촌의 인구·사회·경제·보건 등 모든 지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해 농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는 심각한 상황임.</p> <p>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역에 예산의 95%를 집중 지원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으나 농촌인구 감소 현상을 전환 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임.</p> <p>농촌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농업소득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기후 변화로 농산물 가격 변동 폭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 소득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p> <p>따라서, 농업인 들을 위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p> <p><b>■기대효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li><li>2.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li></ol> <p><b>※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b></p>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폭우, 우박, 냉해 등 자연재해 발생 횟수가 급증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물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임.

따라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대상품목과 적용 지역의 확대는 물론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함.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근거법이 없는 시범사업 상태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보장 범위와 내용을 추가하여 농민들의 수입 안정에 최선을 노력하고자 함.

### ■기대효과

1.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음
2. 농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음.

내용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

충북 중 동남4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지역의료 서비스 질의 낮은 실정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에 선정되었음.

\* 취약지 지정기준 : 권역응급의료센터로 60분 이내 도달이 어렵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

특히 농촌의 경우 고령화의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실정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하고자 함.

■ 기대효과

위 특별법은 부족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 법안이며, 향후 농촌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중 신설되는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통해 22대 총선 공약인 ‘보은 국립 교통재활병원’의 설립 자금으로 일부 활용하고자 함.

내용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p><b>지역공약</b> <b>1</b></p> <p>내용</p>	<p><b>대전~옥천 광역철도 조속 완공 추진(영동군까지 연장 추진)</b></p> <p><b>■현황 및 문제점</b></p> <p>대전-옥천 광역철도는 오정역~대전역~세천역~옥천역 20.1km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여 비교적 적은 공사비로 최고의 교통 편의성을 얻을 수 있는 철도 사업임.</p> <p>대전~옥천 광역철도 노선은 22.5월 설계를 착수하여 24.6월까지 노반, 건축, 시스템 등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이후 조속한 착공을 통해 2026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p> <p>또한 대전~옥천 노선을 영동까지 연장을 추진중으로 지난 12월, 박덕흠의원, 충북도지사, 대전시장과 함께 영동까지 연장에 의견을 모은 바 있음.</p> <p>영동역은 2020년 기준 충북 19개 여객취급 철도역 중 3번째로 철도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임.</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옥천·대전(영동)을 광역 철도로 연결해 줌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농촌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도시와 동반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p> <p>장래 대전 도시지하철,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충북선, KTX 오송역 등 충청권 대중교통망의 시너지 제고하고 나아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광역생활권 기반 마련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기대할 수 있음.</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24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부/기재부 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p> <p><b>■재원조달방안</b></p> <p>총사업비는 국가70%, 지자체 30%(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예관한특별법 시행령)으로, 건설비(통상 거리비례 협상)는 대전 60%, 충북 40%, 운영비(통상 거리비례 협상)는 대전 50%, 충북 50%로 2020년 11월 합의를 하였음.</p> <p>* 지차제간 협상 기준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p>
---	--



<b>지역공약</b> <b>2</b>	<b>영동~옥천~보은~진천 고속도로 조속 추진</b>
<b>내용</b>	<p><b>■현황 및 문제점</b></p> <p>영동~옥천~보은~진천 고속도로는 동남4군 지역구 중 3개 지역을 통과하며, 기존 경부선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노선임. 23년 국토부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2개 방안을 놓고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하였음.</p> <p>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어 KDI에서 적격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임.</p> <p>총 연장은 63.9km이며, 총사업비 1조6,166억원이 투입될 예정.</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동남4군의 부족한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여주며, 신규 남북6축과 동서5축을 건설하여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 보완이 가능함.</p> <p>영동, 옥천, 보은을 통과하여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개발 촉진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예상일정  24. 4월 : 적격성 조사 완료  24. 하반기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4. 하반기 : 제3자 제안공고  26.1월 착공 ~ 30년 12월 준공 목표</p> <p><b>■재원조달방안</b></p> <p>총사업비 1조 6,166억으로 민간사업자 책임하에 자금조달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원조달 문제는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됨.</p>

<p><b>지역공약</b> <b>3</b></p>	<p><b>보은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설 추진</b></p> <p><b>■현황 및 문제점</b></p> <p>국토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전문 재활병원으로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된 병원임.</p> <p>2014년 10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대지면적 90,973㎡, 연면적 4만3,011㎡의 규모로 304개 병상으로 8개과가 운영중에 있음(총사업비 1,600억원,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중).</p> <p>경기도 양평군은 서울-수도권 환자의 집중으로 중부권/남부권 환자들의 병원 접근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중부권에 두 번째 교통재활병원의 설립이 필요함.</p>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p>국립교통재활병원의 추가 설립으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의 집중 재활치료 제공은 물론, 인근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두 가지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p> <p>영동~옥천~보은~진천 간 고속도로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충북 보은의 접근성은 가로축 당진영덕간 고속도로에 더하여 세로축 영동~진천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출 수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 가능한 국토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음.</p> <p>또한, 동남4군 중 보은군은 유일하게 지역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상급 병원이 신설된다면 보은 주민들과 인접 군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p> <p><b>■이행절차 및 기간</b></p> <p>예상일정</p> <p>24. 하반기 : 보은군 타당성검토</p> <p>25. 상반기 : 국토부 사업제안(검토 및 협의)</p> <p>26. 상반기 :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p> <p>27. 하반기 : 착공</p> <p>30. 12월 준공</p> <p><b>■재원조달방안</b></p> <p>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설립함.</p> <p>기금의 조성은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료의 1%를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 있음((24년 예산 : 운용규모 2,654억(지출 589억원), <b>여유자금 2,064억원</b>) )</p> <p>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위 기금의 일부와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 및 활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함.</p>
---------------------------------	--

<b>지역공약</b> <b>4</b>	동서횡단철도(서산~ <b>괴산</b> ~울진)
<b>내용</b>	<p> <b>■현황 및 문제점</b> </p> <p>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괴산~울진 등 13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총 330km 구간, 총사업비 약 3조7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p> <p>         지난 2019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결과 경제성 조사가(BC) 0.242로 낮게 나오면서 노선 추진이 늦춰 졌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을 발주하여 재 추진중에 있음.       </p> <p>         위 노선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었을 만큼 괴산을 비롯한 13개 지자체 지역주민의 숙원 사항임.       </p> <p> <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 </p> <p>         위 노선은 중부권 동서연결 단절구간 해소로 국가철도 네트워크 효과 제고와 기존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 개선이 가능함.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 확충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p> <p>         괴산군 지역 발전을 위해 동서횡단 철도의 신설이 필요하고, 괴산을 인접하여 철도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괴산 주민들의 교통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p> <p>         또한, 연간 50만명이 찾아오는 속리산 둘레길의 확대와 인근 관광지(산막이길 등)의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민의 소득 확대로 이어져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음.       </p> <p> <b>■이행절차 및 기간</b> </p> <p>         예상일정          24. 2. : 제5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노선제안          24. 6 :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결과 수령          25. 4 : 제5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용역 완료          25. 하반기 : 반영여부 확정          26. 예타 신청 또는 예타 면제 추진          27. 기본계획(약2년)          29.~ 실시설계 등       </p> <p> <b>■재원조달방안</b> </p> <p>         전액 국비 조달.       </p>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임호선)

<p><b>입법공약</b> <b>1</b></p>	<p>혁신도시의 특색있는 성장 - 혁신도시법 개정</p>
<p><b>내용</b></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p>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 아래 시작된 혁신도시는 당초 지역특화형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었음. 모든 산업을 독식하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각 혁신도시가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사업을 육성해야 함.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은 전력사업, 부산은 해양산업, 강원은 의료특화였음.</p> <p>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기조가 흐트러지기 시작함.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에 위치했고, 도로교통공단은 강원, 한국도로공사는 경북에, 국토인재개발원은 제주에 있는 등 당초 혁신도시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의 기관 집적이 발생.</p> <p>혁신도시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군의 협업을 적극 독려해야 함. 현행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회공헌 사업에 그치고 있음. 더구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부족하고 지자체와의 협업도 유기적이지 않아 이를 하나로 엮을 거버넌스가 필요.</p> <p>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지역특화형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 <p><b>■기대효과</b></p> <p>둘 이상의 연관산업 공공기관이 협업했을 때의 시너지가 기대됨. 실제로 지난 22년 국토부에서 선정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원사업 우수사례 47건 중 44건이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사업임. 지역별 전략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함.</p> <p>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T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이 위치해 주로 IT 교육 위주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충북혁신도시가 IT교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의미.</p> <p>더구나 진천·음성이 공동으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구로 지정됨. 진천·음성은 지난 21년 K-스마트 교육 시범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카이스트 등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음.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진천군·음성군 간의 협업을 통해 충북혁신도시를 IT교육의 메카로 성장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p> <p><b>※비용추계서 별도 첨부</b></p>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폐기물 매립장 신설의 경우 업체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설명회는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으로 인해 업체의 일방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현실임. 더구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칠 의무가 없고, 설명회·공청회는 주민의 방해가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극한 갈등 상황에서는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

더구나 폐기물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도 집중되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하는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

이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만들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과 유사한 폐기물시설축진법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용

### ■기대효과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단순 혐오시설 기피 문제가 아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거주민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작물의 브랜드 가치에도 치명적.

특히 충북의 경우 전국 폐기물의 16%를 처리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3곳 들어선 청주 북이면에는 10년 새 암환자가 60명이나 발생함. 이 가운데 폐암으로 31명이 숨져 환경부가 추가 보완 조사에 나선 상황.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타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불평등의 구조를 완화해야 함. 폐기물 매립지 허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포함한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한다면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주민공론화위원회 결성 및 회의 개최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지 설치계획이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지될 수 있음. 이는 폐기물 매립지 설치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의 내실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임.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철도는 정확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가 전체적으로 철도교통 사각 지대가 발생. 특히 충청권역은 국토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철도교통망은 매우 열악함. 철도부족은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충청권 광역철도, 충북선고속화, 수도권내륙선 등 충북 관내외를 연결하는 노력에 더해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X축 철도와 충남과 경북을 연결하는 중부권 횡단철도 등 국가차원의 연결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 천안, 청주, 증평, 문경, 울진 등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으로, 개설될 경우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물류루트 구축과 지역화합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례를 참고해 사업의 수혜 대상인 13개 지역의 초당적 협력으로 관련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내용

전체 13개 시·군을 329km 규모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7조 8,000억원(국비100%)임. 서해(산업)과 동해(관광)에 대한 국토 간선망 구축으로 순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남북축 중심으로 치우친 국토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등 전국토 활용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임.

도내에서는 (청주)오창역 신설, (증평)분기역 설치, (괴산) 중심지 관통이라는 충북 3개 시·군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가 기대됨. 특히 중부3군의 경우 전국의 모든 주요도시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 교통 요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p><b>지역공약</b> <b>1</b></p>	<p>증평 송산초등학교 신설</p> <p><b>■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산지구 일원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총 5,426세대)로,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 증가</li> <li>- 송산지구 일원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및 등교길 안전 우려 *증평초 1.5km, 삼보초 1.7km(성인 도보 기준 30분)</li> <li>- 송산지구 학생 유입으로 인해 증평초등학교 학급 과밀 발생(57개 학급 1,306명, 학급당 22.9명)</li> </ul> <p><b>■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 : 송산초등학교 신설</li> <li>- 내용 : 40학급 949명 수용 초등학교 1개소 단독 신설</li> <li>- 총사업비 : 372.2억원(교육청 363.1억원 충북도 9.1억원)</li> <li>- 기대효과 : △송산지구 초등학생 통학안전 확보 및 양질의 교육여건 제공 △증평초, 삼보초 과밀화 해소</li> <li>- 이행방안 : 송산지구 인근 증천지구 도시개발을 통한 학령인구 추가확보로 초등학교 건설</li> </ul> <p><b>■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07. 교육부 2022년도 제1,2,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li> <li>- 24년. 증천지구 도시개발 인가 지원</li> <li>- 25년 하반기. 교육부 중투위 통과 지원</li> <li>- 26년. 예산확보 및 기본설계 개시</li> </ul> <p><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72.2억원(교육청 363.1억원 충북도 9.1억원)</li> </ul> <p>내용</p> 
---------------------------------	---

**지역공약**  
**2**

수도권내륙선 조기 착공

**■ 현황 및 문제점**

- 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 22년 6월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현재 사타조사가 진행 중으로 사타통과 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기본설계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의 지연이 우려됨.
- 사타와 예타를 대기하고 있는 다수 사업이 있는 만큼, 사업 검토의 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정무적 지원이 필요.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위치 : 동탄~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
- 사업기간 : 2021년 ~ 2033년
- 총사업비 : 2조 2,466억원
- 사업내용 : L=78.8km(단선) 광역철도 신설
- 수도권 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속 사업 추진(예타면제 등 추진)
- 한국교통연구원 추산 △생산유발 효과 3조 9,416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1조 2,745억원, △취업유발 약 22,000명, △경기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1시간 30분에서 34분으로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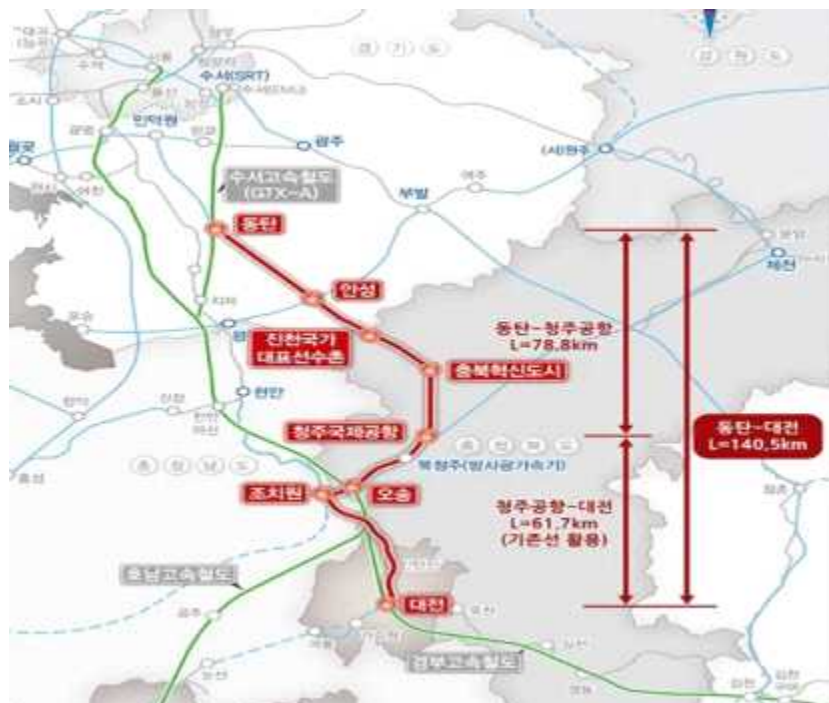
**■ 이행절차 및 기간**

- 24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예정
- 25년.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지원
- 2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지원
- 29년. 철도 건설사업 공사 착공

**■ 자원조달방안**

- 국비 2조 2,466억원

내용





지역공약  
3

중부내륙지선 국가계획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충북혁신도시는 IT 및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어 판교 IT밸리나 강남 등의 지역과 연결될 경우 인적 자원 확보 및 관련산업 육성이 훨씬 용이해짐.
-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혁신도시~광혜원~안성~동탄으로 연결되는 수도권내륙선 계획만 있어 서울 동남부와의 철도 연결이 필요한 상황.
- 혁신도시에서 금왕, 감곡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지선을 부설할 경우 서울 수서에서 혁신도시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수도권내륙선을 활용해 수서~혁신도시~청주공항 연결이 가능하여 혁신도시 발전은 물론이고, 청주공항이 중부권 국제공항으로 활성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아울러 음성~증평~청주로 이어지는 음성군의 기존 철도 축에 더해 감곡~금왕~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 축이 만들어짐으로써 음성군의 전반적인 철도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철도수혜지역 확대, 중부내륙의 철도 접근성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
- 서울(수서)부터 청주공항까지 환승 없이 55분, 대전까지 98분 운행 가능
- 경부선 고속철도 이용 인원은 하루 3,066명, 경부 일반선 이용객 1,230명 줄이는 효과 있음.
- 2035년 기준 승용차는 4,159차례, 버스는 1,312차례 통행이 줄어드는 등 교통 분산 효과 있음.
- 사업기간 : 2026.~2035.
- 규모 : 31.7km(일반철도, 단선)
- 신설노선 : L=31.7km(감곡~금왕~충북혁신도시)
- 총사업비 : 1조 1,203억원(국비 100%)

내용

■ 이행절차 및 기간

- 24년 1월 음성군,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 24년 상반기. 국회 공청회 개최 등 철도 구축 분위기 확산
- 24년 하반기. 관계기관 미팅 및 설득논리 추가 발굴
- 25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 자원조달방안

- 총사업비: 1조 1,203억원(국비 100%)



KBS청주방송총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지역구 후보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님의 입법 공약과 지역 공약을 각각 3가지씩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 양식에 맞춰 공약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공약명은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주세요.

## 22대 국회의원 선거

### 충북 후보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경대수)

<p>입법공약 1</p>	<p><b>국민이 공감하는 정치 개혁, '일하는 국회 실현'</b></p>
<p>내용</p>	<p><b>■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li> <li>- 그러나 지역일정,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로 제재 필요</li> <li>- 또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또는 그 외 기타 사유로 인해 구속되어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국회의원 본인 부담 필요</li> <li>-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을 제시</li> <li>-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일수만큼 세비 감면</li> <li>- 또한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구속된 일수만큼 세비 감면</li> <li>- 다만, 공무상 출장,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및 국무위원 겸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li> <li>- 국회의원수당법 등 개정 추진</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 개혁 추진으로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 확립</li> </ul> <p>※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p>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내용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그동안 환경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충북 및 인접한 중부 내륙지역의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부내륙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12.26.일 제정 되었으나
- 아직까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동·서·남해안및내륙권 발전특별법”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유사법률과 비교하여 정부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등이 미비함. 이를 보완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개정 필요
- 추가적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등으로 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중부3군 지역기회발전특구 선정 및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 규제신속처리 등 규제 개혁, 투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균형발전법 개정 등

### ■기대효과

- 중부내륙 발전을 위한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및 추가, 기업의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환경규제 등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촉진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 초고령사회 노인 권익과 복지 증진

### ■ 입법 취지 및 정책 목표

- 우리나라는 2024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노인 문제들도 대두되는 만큼 기존의 노인정책도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사회통념상 노인의 기준은 “만65세 이상”으로 인식하나 법정 기준이 없으며, 현행 노인복지법은 주로 취약노인을 보호, 지원해 주는 근거법령 성격이 강하여 저출산,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국가 및 사회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로서의 인식과 역할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 세심하고 심도있는 법적 정책적 접근 필요
- 노인의 인권과 시민권 관점 도입 및 시대변화에 따른 노인교육 반영
-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지원규정 추가 및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 확대
-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노인 지원 등)
- 아울러, 노인복지관 등 사회변화에 따라 추가된 노인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일부 사업비 국비지원 근거 등을 마련
- 노인기본법 제정 및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
- 노인 관련 각종 사업이 정부부처별로 분산·추진되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 사회보장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노인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음. 신설 추진 중인 인구부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 문제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노인청 신설 추진
-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 ■ 기대효과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을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노인복지 대상에서 국가 발전의 참여주체로 재인식하는 계기 마련
- 노인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역돌봄과 의료서비스 등 노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대다수 노인지원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후 지자체 예산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를 감소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 도모.

※비용추계서 있을 시 별도 첨부

지역공약 <b>1</b>	<b>중부내륙선철도 지선(감곡~금왕~혁신도시) 추진</b> <span style="float: right;">(대통령공약)</span>
내용	<p><b>■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혁신도시 중 교통환경 만족도가 최하위이며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고 광역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 경우 철도망 구축 필요</li> <li>- 성남,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권과 음성, 진천 등 충북 중북부의 발전축과 충청권 중심도시인 청주 및 청주공항을 잇는 철도가 없어 물류비 증가 등 지역발전 저해</li> </ul> <p><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중부내륙선 철도 지선(감곡~금왕~충북혁신도시) 추진</li> <li>◆ 사업기간 : 2026. ~ 2036.(11년간)</li> <li>◆ 규모/사업비 : L=31.7km/ 1조 749억원(전액국비)</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강선(성남~여주, '16년) 복선 전철과 중부내륙선(이천~충주, '21년), 진행중인 수서~광주 철도사업 연계 시 접근성이 대폭 개선</li> <li>- 수도권과 청주공항의 접근시간 단축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 활성화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서~청주공항: (버스) 232분 → (철도) 52분, △180분</li> </ul> </li> <li>- 음성·진천 등 충북 중·북부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발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발) 2조 9천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 7천억원, (고용유발) 1.7만 명</li> </ul> </li> </ul> <p><b>■ 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22.12월)</li> <li>-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건의(도→국토부, '24. 2월)</li> <li>-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국토부, '25. 6월)</li> </ul> <p><b>■ 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망구축 사업은 국가사업이므로 제5차 철도망계획 반영후 소요사업비 1조749억원을 국비로 추진</li> </ul>

지역공약 <b>2</b>	<b>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완공(예타면제 추진)</b> (대통령공약)
내용	<p><b>■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은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나</li> <li>-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li> </ul> <p><b>■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동탄~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li> <li>◆ 사업기간 : 2021~2033</li> <li>◆ 소요예산 : 약2조 2,466억원</li> <li>◆ 주요내용 : L=78.8km(단선) 광역철도 신설</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10호가 정한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으로 선정,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정법」제38조 ⑩.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li> </ul> </li> <li>- 수도권 남부권과 청주, 음성, 진천 등의 산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li> </ul> <p><b>■ 이행절차 및 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 계획 구상(‘24년 ~ ’25년)</li> <li>-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고시(‘25년 ~ ’28년)</li> <li>- 철도 건설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28년~’33년)</li> </ul> <p><b>■재원조달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망구축은 국가사업이므로 소요사업비(2조 2,466억원)를 국비로 확보, 사업추진</li> </ul>

■ 현황 및 문제점

- 중부고속도로는 교통량 증가로 6차로 확장기준(51,300대/일)을 크게 초과.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25년)후에도 확장기준 초과(7.1만대/일)
- \* 증평-진천 '22년 7.3만대/일(45% ↑)/ 남이천-호법 '22년 8.0만대/일(56% ↑)
- 산업단지 증가에 따른 물동량, 화물차 통행량 증가로 교통혼잡비용 증가 및 사고다발지역(진천터널~ 농다리) 개선 필요
  - ▶ 산업단지 수 : '11년 80개소 2,711만㎡ → '22년 124개소 7,079만㎡ (161% ↑)
  - ▶ 음성,진천 종사자 수 : '11년 82,266명 → '22년 145,181명 (76.4% ↑)
- 영동~진천 고속도로(민자, '31년 완공)시 증평~호법 구간 교통량(+20%) 증가,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 위 치 : 남이JCT ~ 서청주IC ~ 증평IC ~ 대소JCT ~ 호법JCT
- ◆ 사업기간 : 2024. ~ 2033
- ◆ 사업비 : 1조 5,666억원
- ◆ 규모 : L=78.5km(4→6차로 확장)

- 현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 추진 중으로, 나머지 증평~호법간 6차선 확장사업 등을 추진 및 완공하여 고속도로 기능 회복, 도로안전성 증대와 청주공항 접근성 증대에 따른 항공산업 활성화, 중부권 산업·경제발전 도모

■ 이행절차 및 기간

- 중부고속도로 확장 증평~서청주 구간 2024년 착공 추진
- 증평~호법, 남이~서청주 구간 사전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4년~)

■ 재원조달방안

- 사업비(1조 5,666억원)를 국비 및 한국도로공사 예산확보 추진

내용

의안번호	2126480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4.02.21.
추계번호	24D013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자녀수당”)에 대해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40억원, 2026년 2,29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2,344억원, 연평균 2,469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 시, 유족의 보상금 소멸시점에 따른 차등 금지 (안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신설)	2,140	2,293	2,457	2,633	2,822	12,344	2,469

##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신설(6·25 전몰군경자녀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에 대해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에 따른 차등 금지	의무규정

##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3항 단서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 시행령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여부, 최초 보상금 수급대상 및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에 따라 자녀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 현행 시행령 제27조의3제7항 관련 [별표 5의5]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 최초 보상금 수급 대상(미성년 자녀와 그 외 유족의 구분),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는 시점, 그 외 유족의 경우 1998년 1월 1일 전·후)에 따라 자녀수당 수혜대상을 1호부터 4호까지로 구분하고 있음.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는 동액을,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는 제1호와 제2호 자녀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음

[표 2] 현행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지급 구분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기본급: 1,613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1,372천원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16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비용추계에서는 자녀수당 지급 구분별 인원 및 단가 차이를 활용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와 법 개정 시 예상되는 재정소요 간의 차액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

- 현행대로 지급구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향후 예상되는 재정소요와 개정안에 따라 지급구분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도 지급구분 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산정하여, 현행과 개정안 간의 재정소요 차액을 추가 재정소요로 추계함
- 제1호와 제2호 자녀에게 지급되는 위로가산금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경우 특별히 지급되는 가산금으로 동 재정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음
- 지급구분 별 지급인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향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연평균 인상률 4.7%<sup>1)</sup>을 적용
- 안 부칙에서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액에 대해 유족의 보상금 소멸시점에 따른 차등 금지(안 제16조의 3 제3항 단서 신설)
- (지급구분별 지급인원)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인원은 2025년 3만 1,026명에서 2029년 3만 3,03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급구분별로 보면, 2025년 제1호 및 제2호 해당인원은 6,124명, 제3호 해당인원은 1만 1,910명, 제4호 해당인원은 1만 2,992명임

1)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률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인상률(%)	5.0%	3.0%	5.0%	5.5%	5.0%	4.7%

[표 3] 당초 기준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구분별 지급인원 추계(2025~2029)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6,124	6,205	6,287	6,370	6,454
[별표5의5]의 제3호	11,910	11,967	12,025	12,083	12,141
[별표5의5]의 제4호	12,992	13,341	13,699	14,067	14,444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858	866	874	883	892
합계	31,026	31,513	32,011	32,520	33,039

주: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녀 간 협의 등에 따라 1인에게 지급하거나 균등분할지급함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2024~2028 중기계획 요구 인원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 (지급단가)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연평균 인상률 4.7%를 적용하여 산정한 2025~2029년 지급구분별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 당초 기준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구분별 월 지급단가(2025~2029)  
(단위: 천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689	1,768	1,851	1,938	2,029
[별표5의5]의 제3호	1,436	1,504	1,575	1,649	1,726
[별표5의5]의 제4호	540	566	592	620	649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114	114	114	114	114

주: 최근 5년간 추가지원금 인상은 없었음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2024~2028 중기계획 요구 인원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급구분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도 지급구분 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140억원, 2026년 2,293억원 등 향후 5년간 1조 2,344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2025~2029)  
: 제3호·제4호 자녀에게 제1호·제2호 자녀와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당초 재정 소요 (A)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053	2,160	2,272	2,391	2,515	11,391
	[별표5의5]의 제4호	842	906	974	1,047	1,125	4,893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12	12	12	12	12	60
	합계	4,148	4,394	4,654	4,931	5,224	23,351
개정안 재정 소요 (B)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414	2,539	2,671	2,810	2,957	13,391
	[별표5의5]의 제4호	2,633	2,831	3,043	3,272	3,518	15,296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0	0	0	0	0	0
	합계	6,288	6,687	7,111	7,564	8,046	35,695
	추가 재정소요(B-A)	2,140	2,293	2,457	2,633	2,822	12,344

주: 제적자녀에게 지급되는 위로가산금은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경우 특별히 지급되는 가산금으로 동 재정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음

####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지급구분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도 지급구분 제1호 및 제2호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하였으나, 유족의 범위 및 보상금 소멸시점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의 보상금 소멸시점을 사유로 자녀수당에 대한 차등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해석할 경우, 제4호 자녀에게 제3호와 동일하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86 억원, 2026년 1,490억원 등 2025~2029년 기간 동안 8,058억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2025~2029)  
: 제4호 자녀에게 제3호 자녀와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당초 재정 소요 (A)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053	2,160	2,272	2,391	2,515	11,391
	[별표5의5]의 제4호	842	906	974	1,047	1,125	4,893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12	12	12	12	12	60
	합계	4,148	4,394	4,654	4,931	5,224	23,351
개정안 재정 소요 (B)	[별표5의5]의 제1호, 제2호	1,241	1,317	1,397	1,482	1,572	7,008
	[별표5의5]의 제3호	2,053	2,160	2,272	2,391	2,515	11,391
	[별표5의5]의 제4호	2,240	2,408	2,589	2,783	2,992	13,011
	[별표5의5]의 제4호 중 추가지원금 수급자	0	0	0	0	0	0
	합계	5,534	5,884	6,258	6,655	7,079	31,409
	추가 재정소요(B-A)	1,386	1,490	1,603	1,724	1,855	8,058

## V.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